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언론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미디어단지 조성방안

2021. 12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

제 출 문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언론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미디어단지 조성방안》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책임자 : 우희창(언론학 박사·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공동연구원 : 김용진(언론학 박사)

목 차

I. 세종시와 행정도시 건설사업 개요	08
II. 본 사업 추진 배경	
1.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추진	10
2. 국회세종지사당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 공포	10
3. 대선 공약으로 ‘세종 미디어단지(SMC)’ 조성 제시	10
4. ‘언론수도’ 및 ‘언론(미디어)단지’ 조성 추진 공포	11
III. 언론단지 조성 추진 연혁	
1. 행복도시건설청, 언론단지 조성 또는 프레스센터 건립 추진	14
2. 언론사 입주 3가지 방안-언론단지, 프레스센터, 개별신축 모색	15
3. 언론단지 부지 5필지 중 2필지 입주 완료, 3필지 미분양	16
VI. 미디어단지 조성 사례 검토	
1. 국내 사례	19
1)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19
(1) 사업 개요	19
(2)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22
(3) 투자자 인센티브 제도	23
(4) DMC 사업 차질사례	23
(5) DMC 육성 과제	24
(6) 2021년도 활성화 계획	25
(7) 시사점	25
2) 고양 방송영상밸리	25
(1) 사업 개요	25
(2) 추진 경위	26
(3) 목표 및 전략 설정	27
(4) 시사점	29
3) 대전 스튜디오큐브	29
(1) 사업 개요	29
(2) 시사점	32
4) 실패 사례: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32
(1) 사업 개요	32
(2) 시사점	33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사례	33
(1) 사업 개요	33
(2) 시사점	36
2. 해외 사례 : 미국 행정수도 워싱턴D.C. 소재 미디어 현황	37
1) 워싱턴 D.C.	37
2) The Senate Daily Press Gallery	37
3) 워싱턴 D.C.에 소재한 언론사들	38
(1) 워싱턴 포스트	38
(2) 워싱턴 타임스	39
(3) U.S. 뉴스&월드 리포트	39
(4) 워싱턴 시티 페이퍼	39
(5) USA 투데이	40
(6) 폭스 뉴스	40

V. 세종시로 이전 계획 중인 미디어 현황

1. 세종시와 협약 맺은 서울 언론사	43
1) 경향신문	43
2) 한겨레신문	44
3) 연합뉴스	45
4) 오마이뉴스	45
5) MBC	46
6) YTN	48
7) MBN	49
8) EBS	49
9) SBS미디어넷	50
2. 세종시와 협약 맺은 대전지역 언론사	50
1) TJB(대전방송)	50
2) 충청투데이	51

VI. 제언과 결론

1. 제언	53
1) 용어(개념) 정립	53
(1) ‘언론수도’ 브랜드 네이밍	53
(2) ‘언론’과 ‘미디어’	53
2) 민간시설과의 혼란 예방	54
3) 사업지원 자치법규 제정	54
4) 충청권 시·도 협력 모색	55
5)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 추진	55

2. 세종시 미디어단지 조성 방안	56
1) 프레스센터 건립안 - 세종프레스센터 또는 한국프레스센터 세종분원	56
(1) 공공청사 프레스센터 운영 사례	56
(2)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회관)	57
2) 미디어스트리트 조성안 - 세종언론거리(SMS)	58
3) 미디어단지 또는 M&E클러스터 조성안 - 세종미디어시티(SMC)	58
(1) 미디어산업과 미디어 클러스터의 의미	58
(2) 본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현재 입장	59
(3) 본 사업에 대한 국회법 개정(세종의사당) 이후 상황	61
4) 조성 방안별 종합평가	66

I. 세종시와 행정도시 건설사업 개요

행정도시 건설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근거법률	약칭 행복도시법(2005년 제정·시행) ¹⁾
사업내용	예정지역(73km ² /2,200만평)에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
시행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기간	2007~2030년 *2007. 7. 20. 기공식
총사업비	22.5조원 (국비 8.5조원, LH 14조원)
개발전략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설 -1단계(2007~2015, 15만명) -2단계(2016~2020, 30만명) -3단계(2021~2030, 50만명)

<출처> 행정도시건설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시에서 행정도시의 비중

구분	세종시	행복도시
면적	464.8km ² *서울(605.2km ²)의 3/4	72.9km ² (세종시의 15.7%) *서울의 1/8
인구	35.5만명	26.5만명 (세종시의 74.6%) *2030년 계획인구 50만명

<보기> 2020.12.31.기준. 생=생활권.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팸플릿(2017); 세종시 통계.

전국 시·도 지역세(地域勢) 비교

市道	市郡區 (개)	면적 (km ²)	인구 (천명)	지역소득		예산(억원)		
				GRDP(실질) (십억원)	1인당GRDP (천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26	100,412	51,829	1,854,370	37,274	1,712,546	1,483,797	228,750
서울	25	605	9,668	414,092	45,118	335,936	259,394	76,541
부산	16	770	3,391	89,105	27,577	124,099	102,808	21,291
대구	8	883	2,418	54,762	23,883	86,973	73,426	13,547
인천	10	1,065	2,942	87,963	30,584	110,880	85,489	25,391
광주	5	501	1,450	39,624	27,799	59,805	49,319	10,486
대전	5	539	1,463	40,684	28,561	54,008	47,028	6,981
울산	5	1,062	1,136	72,024	65,112	38,555	32,635	5,919
세종 (점유율)	-	464 (0.5%)	355 (0.7%)	11,091 (0.6%)	35,802	16,657 (1.0%)	13,083 (0.9%)	3,574 (1.6%)
경기	31	10,195	13,427	462,288	36,064	270,614	247,022	23,592
강원	18	16,829	1,542	46,064	32,192	63,542	59,915	3,628
충북	11	7,406	1,600	66,927	42,704	55,107	51,606	3,501
충남	15	8,246	2,121	112,310	51,874	75,813	71,834	3,980
전북	14	8,069	1,804	49,506	28,835	75,825	71,196	4,629
전남	22	12,348	1,851	74,618	43,402	87,447	82,257	5,189
경북	23	19,034	2,639	104,417	40,082	100,492	93,326	7,166
경남	18	10,540	3,340	109,370	34,040	101,195	94,430	6,765
제주	-	1,850	674	19,186	30,792	55,598	49,029	6,569

<보기> 市郡區·면적·인구·예산: 2020.12.31.기준(시·군·구 예산 제외) / 지역소득(지역내총생산, GRDP): 2019년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2021행정안전통계연보; 2021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Ⅱ. 본 사업 추진 배경

1.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추진
2. 국회세종지사당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 공포
3. 대선 공약으로 '세종 미디어단지(SMC)' 조성 건의
4. '언론수도' 및 '언론(미디어)단지' 조성 추진 공표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²⁾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 국회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 건의 및 공감대 확산
 - 공청회 개최 지원, 세종의사당 필요성 홍보 등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본격 추진
 - 건립계획 확정, 사전절차 진행, 설계용역 등



- 2020년 주요 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2021년 정부예산 127억원 반영
- 국회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 건의 및 공감대 확산: 공청회 개최 지원, 세종의사당 필요성 홍보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본격 추진: 건립계획 확정, 사전절차 진행, 설계용역 등

2.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 공포

국회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474호, 2021. 10. 14., 일부개정]³⁾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分院(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 대선 공약으로 ‘세종 미디어단지(SMC)’ 조성 건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발전 핵심과제: 제20대 대선 공약⁴⁾

- 우리시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주요정당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과제 10개를 건의한 바 있음-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국회·청와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등 10개
 -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 국회分院 설치, 과기부·행안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시켰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음
- 오늘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의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우리시 지역발전 핵심과제로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하고자 함
 - 세종시 지역공약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7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 다섯째는 ‘세종 미디어단지(SMC) 조성’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수도권 10여개

2) 세종시 2021년 주요업무계획(2021. 1.)

3)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分院(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4) 세종시 제354회 시정 브리핑 자료(2021. 9. 30.)

주요 언론사가 우리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시를 뉴스 제작과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 조성을 건의하려 함.



세종 미디어단지(SMC) 조성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언론사 11개사와 업무협약 및 세종시 이전 검토 중
 - 뉴스미디어 수요 대응과 문화콘텐츠 구축 및 집적화를 위해 국회 인근에 미디어단지 조성
- <출처> 세종시 제354회 시정 브리핑 자료(2021. 9. 30.)



언론사의 잇따른 세종행 러시...'세종미디어단지' 조성되나?5)

이춘희/세종시장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종시를 뉴스 제작과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 조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4. '언론수도' 및 '언론(미디어)단지' 조성 추진 공표

■ '경향세종본부(가칭)' 건립 업무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와 경향신문이 28일 세종시청 중정홀에서 '경향세종본부'(가칭)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미디어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향세종본부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경향신문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행정과 정치가 중심이 되는 행정수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향신문의 세종 진출로 세종시가 뉴미디어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도 경향세종본부 건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보도자료 2021. 5. 28.)

5) B tv 세종뉴스 2021. 9. 30.

http://ch1.skb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130643

■ 국회 세종시대 눈앞…세종, 언론수도 되나⁶⁾

국회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해 행정 비효율 개선, 균형발전 촉진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기능과 연결된 전후방 산업의 지방 이전 효과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여기에 이전 대상을 국회 외부로 확대하면 입법 기능과 관련한 출판·인쇄 및 컨벤션 관련 업체, 연구보좌기관, 언론사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은 물론, 대학, 기업 등 지방 이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언론(미디어)단지를 조성, 국회-행정-언론 간 연계·협력으로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도시가치를 향상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채널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이전으로 세종에 대한 언론사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미디어단지 조성을 통해 세종의 도시가치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대외적 영향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보도자료 2021. 9. 30.)

■ 뉴스 중심축 세종에 ‘뉴스핍 세종’ 세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뉴스핍과 ‘뉴스핍 세종’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치·행정수도를 넘어 언론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시와 뉴스핍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민병복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뉴스핍 세종’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제는 행정과 정치뿐만 아니라 뉴스의 중심축도 세종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뉴스핍 세종 건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보도자료 2021. 10. 21.)

■ 국민일보 성장 전략지로 언론수도 세종 선택

국민일보(주)가 정치·행정수도이자 언론수도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민일보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변재운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일보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시는 국회세종의사당 개원과 맞물려 세종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매체들을 위해 미디어단지 조성을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일보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언론기관이 정치·행정수도 세종에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보도자료 2021. 11. 4.)

6) 세종시 보도자료에 ‘언론수도’ 및 ‘언론(미디어)단지’ 표현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다만 ‘언론수도’의 경우 본문에 내용 설명 없이 제목에만 언급된 점에서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정치적 수사(修辭 rhetoric)에 머물고 있다.

Ⅲ. 언론단지 조성 추진 연혁

1. 행복도시건설청, 언론단지 조성 또는 프레스센터 건립 추진
2. 언론사 입주 3가지 방안-언론단지, 프레스센터, 개별신축 모색
3. 언론단지 부지 5필지 중 2필지 입주 완료, 3필지 미분양

1. 행복도시건설청, 언론단지 조성 또는 프레스센터 건립 추진

■ 언론기관 초청 세종시 입주방안 설명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공사는 1월 27일 오후 2시,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기관을 초청하여 세종시 입주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세종시 입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언론기관으로부터 입주 가능한 위치 및 가격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 가고 있다고 건설청 관계자는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세종시 소개와 함께 언론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위치, 토지 가격, 입주 방안(언론단지 조성 또는 프레스센터 건립방안 등), 취재지원시설(브리핑룸, 기자실 등) 배치방안 등을 소개한다.(행정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12. 1. 25.)

■ 지방언론기관 세종시 입주방안 설명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공사는 2월 7일 오후 2시, 건설청 대회의실에서 지방 언론기관을 초청하여 세종시 입주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 언론기관으로부터 세종시 입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 설명회에서는 세종시 소개와 함께 언론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위치, 토지 가격, 입주 방안(언론단지 조성 또는 프레스센터 건립방안 등), 취재지원시설(브리핑룸, 기자실 등) 배치방안 등을 소개한다.

□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동반하여 상당수의 지방 언론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송기섭 건설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방 언론기관의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행정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12. 2. 6.)

■ 47개 언론기관, 행복도시 현장 방문

□ 47개 언론기관의 기자들이 2월 8일(수요일) 행복도시 건설현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두 차례의 세종시 설명회(1.27, 2.7)에서 여러 기자들이 세종시 현장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서 송기섭 청장은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10~2.29)하고 있는 세종시 입주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단지 조성, 프레스센터 건립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언론인들이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입주하는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밝혔다.

□ 건설청 관계자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이 될 행복도시는 핵심정보가 교류되는 도시이므로 언론기관도 신속히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행정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12. 2. 9.)

2. 언론사 입주 3가지 방안-언론단지, 프레스센터, 개별신축 모색

■ 언론사 세종시 입주 “어디 좋은 땅 없나”⁷⁾

올해 7월 1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언론사들의 세종시 입주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주요 부처가 이전하면서 지역 취재 본부를 두고 취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취재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장 세종시 출범이 닥치면서 언론사들의 입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다. 지난 27일 수도권 소재의 언론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입주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단 세종시의 언론사 입주는 3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제1안으로는 약 3만~5만㎡를 조성해 언론단지를 만드는 방안이다. 상암DMC 단지와 같이 언론사들이 한 단지 안에 모여있는 방안이다. 상암DMC의 경우 7만㎡ 규모에 20개 언론기관이 입주해 있다. 토지공급 방식은 경쟁입찰 또는 사업제안을 공모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지만 토지공급 가격이 감정가격으로 공급돼 상업업무용지의 약 80~90% 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상업업무용지의 토지공급가격은 180~230만/㎡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단지를 만들어 언론기관에 한정하면 용도가 제한된 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땅값이 저렴하게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언론단지 입주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언론사도 늘고 있다. 도시건설청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수요를 조사한 결과 조선일보, YTN, MBN, BBS 불교방송, 뉴스토마토 등 5개 언론사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언론사들은 단지 내에 평균적으로 약 300평 정도 대지면적의 건물에 입주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단지를 구획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입주수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의 수요를 보고 언론단지 조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2안은 프레스센터를 건립해 입주하는 방안인데, 건축면적 1~3만㎡에 건물을 세워 언론사들을 모아두는 방안이다.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투자하는 방식과 투자자를 물색해 민간부문에서 임대사업 투자를 하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프레스센터 입주 방안에 대한 언론사들의 수요는 없는 상황이고, 민간 투자자들이 임대사업 투자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3안으로는 언론기관이 원하는 위치의 토지를 매입해 개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해 입주하는 방안인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 하루 평균 10곳의 언론사들이 입주 방안에 대한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월 들어 언론사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고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론사들의 파견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부족해 실제 파견을 나올 취재기자들의 고충도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가구는 6000가구로 언론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가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단지 입주를 희망한 언론사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부지 조건을 더 알아보고 있다”면서 “중앙부처가 가기 때문에 일종의 취재 본부가 필요하고, 방송을 현지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개 부처 기준으로 상당한 취재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 미디어오늘 2012. 2. 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55>

3. 언론단지 부지 5필지 중 2필지 입주 완료, 3필지 미분양

언론단지 위치도 및 입주현황

※ 참고 : 언론단지 위치도 및 입주현황



구분	면적 (㎡)	연면적 (㎡)	입주 현황
① C39-1	1,521	5,463 (지하2/지상7층)	금강일보
② C39-2	1,521	-	-
③ C39-3	3,000	23,930 (지하3/지상12층)	한국일보
④ C40	1,500	-	-
⑤ C41	5,000	-	-



어진동 언론단지 5필지 중 세종포스트와 금강일보가 들어선 2필지와 여전히 나대지 또는 임시 주차장으로 남아 있는 3필지 전경. <출처>세종의소리 2017. 1. 9.; 세종포스트 2021. 3. 22.⁸⁾

■ 세종시로 ‘방송사 유치’ 효과, 제2언론단지 적극 조성해야⁹⁾

그동안 세종시에 언론단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세종청사 옆 어진동에 언론단지 5개 필지가 조성돼 이중 2필지에는 각각 금강일보와 본지가 이미 들어와 있다. 2~3년 전부터 충청권 지역 일간지와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남은 3필지로 이전 또는 지사 계획을 세우고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지는 1000평 안팎의 작은 규모여서 필지가 수만 평이 필요한 중앙방송사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66만1000㎡ 외 유보지 규모가 180만㎡에 달한다. 미디어단지를 따로 만들 것인지는 개별 언론사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단지 대체 용지를 보다 크게 잡는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 행복도시 언론부지, 언제 공급하나요¹⁰⁾

행복도시 내 언론단지의 공급 시기와 방법, 가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는데다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도시 완성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각 언론사의 판단이 언론부지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1차 공급 당시만 해도 언론관련 기관 50% 입주 조건으로 인해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기존 언론사 건물의 한시적인 조건 완화와 부지 위치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부지에 대한 행복청의 입장은 실수요 조사를 통해 행복도시의 언론기능에 적합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입찰로 언론사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중에 수요조사에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후 공급의 필요성 인정 시 3월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아있는 언론부지는 1-5생활권 C41 5,000㎡, C40 1,500㎡ 와 C39-2 1,521㎡ 등 3개 필지로 동시 분양, 또는 시차별 분양 등 공급 방식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분양

8) 세종포스트 2021. 3. 22. [기획·탐사보도] 정부청사·상업기능 품은 세종시 '1~2생활권', 미래를 본다(2)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33>

9) 세종포스트 2021. 3. 6.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05>

10) 세종의소리 2017. 1. 9.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26>

가격은 1차 때와 같이 2개 기관의 감정을 통해 결정하며 3개 부지 중 일부는 수요조사에 따라 주차장 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 여지도 남아있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지난 2012년 12월 1차 공급에서는 한국일보와 콘소시엄을 구성한 디트뉴스24(현 세종포스트 입주)부지가 평당 693만원, 금강일보가 628만원에 공급받았다. 금강일보는 2015년 4월, 세종포스트 건물은 2016년 5월에 준공하고 입주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한 관계자는 “언론부지 공급 여부는 행복도시 언론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요의 실재 여부에 달려있다”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부지는 사업 계획 70%, 참여 언론기관 현황 30% 등으로 평가하며 세종포스트 건물에는 6층-12층까지 한시적으로 인사혁신처가 입주해있다. 금강일보 빌딩은 금강일보 외에 언론사 공간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V. 미디어단지 조성 사례 검토

1. 국내 사례

- 1)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 2) 고양 방송영상밸리
- 3) 대전 스튜디오큐브
- 4) 실패 사례: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사례

2. 해외 사례: 미국 행정수도 워싱턴D.C. 소재 미디어 현황

- 1) 워싱턴 D.C.
- 2) The Senate Daily Press Gallery
- 3) 워싱턴 D.C.에 소재한 언론사들

1. 국내 사례

1)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DMC 전경과 DMC에서 가장 눈에 띄는 MBC 앞 조형물 <右>. <출처>서울산업진흥원 사이버홍보관 'SBA Talk'¹¹⁾, 서울시 대표 소통포털(2020. 8. 10.). 상암 DMC, 첨단미디어와 재미의 완벽한 공합!¹²⁾

(1) 사업 개요¹³⁾

DMC는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의 약자로서 서울 서북권의 관문인 상암 지구(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569,925m²(약 17만 2천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M&E) 클러스터이다. 월드컵 경기장과 공원, 친환경주거단지 등과 함께 상암새천년신도시를 구성하는 DMC는 최첨단을 달리는 국내의 우수하고 풍부한 IT 기술과 인적 자원 그리고 한류(韓流)열풍의 진원인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역량이 결집되었다.

DMC의 성격은 도심형 멀티미디어 집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애틀 멀티미디어(캐나다 몬트리올), 실리콘 밸리(미국 뉴욕)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으로 디지털기술 관련 종합연구생산단지로서 디지털허브(아일랜드 더블린), 소피아폴리스(프랑스 코트다쥐르)와 같은 면모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계획된 미디어 특화단지로서의 미디어파크(독일 쾰른), 계획된 비즈니스타운으로서 시티웨스트(아일랜드 더블린), 텔레포트(일본 도쿄) 등과도 흡사한 면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 DMC단지 조성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단지 조성 공사비를 합하여 총 1조 70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이 비용은 토지분양을 통하여 회수한다.¹⁴⁾

DMC의 주요 유치업종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방송,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온라인 교육 등 다섯 개의 주요 유치업종이 있으며, 최근에는 IT 기술과의 융합이 빈번해지고 있어, IT 회사들과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뉴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2001년 월드컵 경기장, 2002년 월드컵 공원 개장에 이어 2002년부터 입주기업과 투자자가 선정되고, 동시에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었다. 2006년 KBS미디어 등이 준공되었고, 2010년 건물의 대거 준공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다. 정착시기 이후 활성화 단계가 시작된 DMC는 공영방송사들의 입주로 미디어단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동북아

11) 서울산업진흥원 사이버홍보관 'SBA Talk'. DMC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서울의 대표 디지털기술 특화도시가 되다! <https://www.sba.seoul.kr/kr/sbbs01s1/5031105#>

12)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2189>

13) 이하 서울산업진흥원 <https://www.sba.seoul.kr/kr/sbst15h1#business03>

14) 방송통신위원회(2009).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전략 연구

최고의 한류문화콘텐츠 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2단계 재창조계획을 설립하였다. 이후 2016년 미디어 산업부문에서의 막대한 가치 창출과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주 및 지역 활성화가 진행 중이다.¹⁵⁾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도 DMC단지의 성공요인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 무엇보다 DMC 프로젝트는 쓰레기 산이었던 상암 난지도를 현재와 같은 최첨단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보고 배워야 할 도시 개발 사례가 된 것이다. DMC는 관광지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DMC의 대표적인 행사로 dmc페스티벌(DMCF)이 있고 영화와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촬영지로 유명하다.

DMC 개요

구분	내용
성격	첨단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660만㎡/200만평) 내
시행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기간	2002 ~ 2010(1단계 완료) / 2단계 재창조계획(2010) ~ 활성화 단계
사업비	1조 700억원
부지규모	569,925㎡/17.2만평(사업용지 335,134㎡/10.1만평, 공공용지 234,791㎡/7.1만평)
유치업종	-방송,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디지털교육 등 미디어산업 및 엔터테인먼트(M&E)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는 산업 -디지털콘텐츠 유통·소비산업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업 -IT, BT, NT 연구·제조업
현황 (2020.10.)	-용지공급 49/52필지 -준공건물 45개 -입주율 94.0% -입주기업 552개 -종사자 39,561명

<출처>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방송통신위원회(2009), 박소희 등(2016), 그밖에 참고자료 인용 정리



DMC 개요도와 조망 사진. <출처> 서울시 유튜브 화면 캡처(2020 마곡·문정·DMC 국제 컨퍼런스, 2020. 10. 21.)¹⁶⁾

15) 박소희 등(2016). 상암 미디어 클러스터 사례연구

C1,C2	MBC
D1-1	(주)SBS(SBS I&M: SBS프리즘타워)
D1-2	(주)YTN, (주)YTN plus
D2-2	(주)동아일보(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
E2-1	중앙일보
E2-2	중앙홀딩스(JTBC)
E3-1	KBS Media(KBS미디어센터)
E3-3	서울시 S-Plex Center(tbs교통방송)
주2	(주)MBC C&I/iMBC(MBC미디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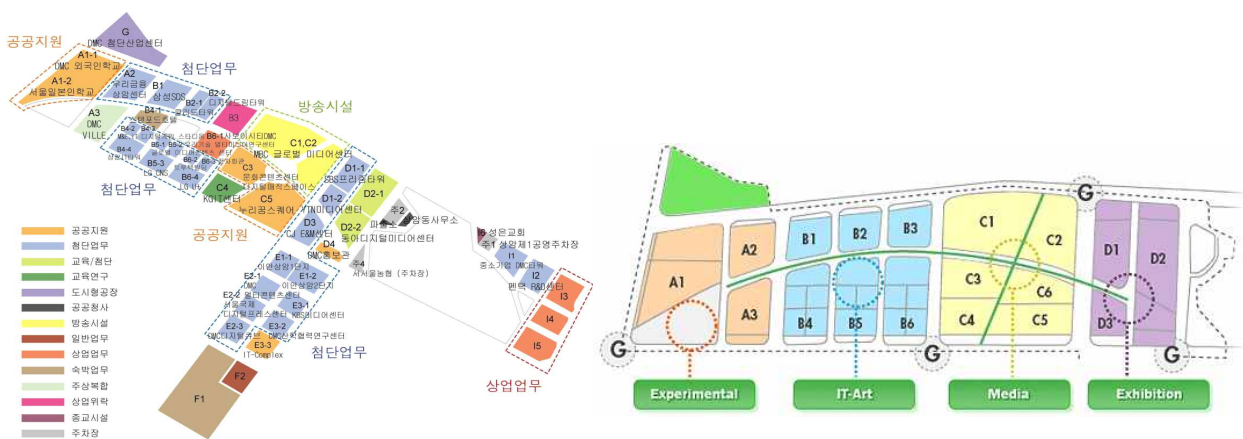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DMC 기본 계획 확정									
핵심 입주 기업 유치 및 마케팅 활동									
		토지 공급							
			선도 시설 및 핵심 입주 기업 건설 완료						
									단지 조성 사업 마무리

구분	주요 추진 내용
민선2기	- 새서울타운 발전구상(1999) - 상암새천년신도시 기본계획(2000) -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2001) - DMC 지구단위계획(2001) - DMC 지원조례 제정·공표(2002)
민선3기	- DMC 사업실행전략(2002) - DMS(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 기본계획(2003) - DMC 관리운영주체 설립에 관한 연구(2005) - DMS 조성 기본계획(2005)
민선4기	- DMS 조성 실시설계(2007) - DMC 중간평가 및 활성화방안(2007) - DMS 조성 1차(2008) 및 2차 사업(2009) - DMC 종합 발전계획(2010) - DMC 2단계 재창조 계획(2010) - DMC 영상문화허브단지 조성 방안(2011)
민선5기	- 상암·수색권역 종합발전계획(2013)
이후	2013년 10월 동아일보 사옥 준공 2013년 12월 중앙일보 사옥 준공 2014년 04월 YTN 사옥 이전(NEWSQUARE) 2014년 08월 MBC 사옥 이전 2014년 12월 채널A 사옥 준공(DDMC) 2015년 01월 JTBC 사옥 준공 2015년 09월 SBS 사옥 준공(SBS프리즘타워) 2016년 07월 tbs 사옥 이전(S-Plex Center) 2020년 10월 중앙일보 사옥 이전

16) <https://www.youtube.com/watch?v=l38yScGDHkg>

(2)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¹⁸⁾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Digital Media Street)는 DMC의 중심가로에 디지털 기술과 도시환경이 융합되는 세계 최초 가로단위의 첨단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첨단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의 실험공간으로 구현되어 DMC단지 안의 혁신이 일상으로 창출되는 거리이다. DMS는 IT기술로 매개된 디지털 가로환경에 미디어콘텐츠를 결합하여 가로활동, 물리적 공간, 사이버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DMC 중심가로서 DMC를 첨단 디지털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실험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DMC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DMS는 DMC 중심가로(Core of DMC)로서 첨단기술과 생활의 쾌적성이 동시에 갖춰진 미래생활의 살아있는 실험실이자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일, 오락, 그리고 생활방식과 미디어 기술 등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실험장의 성격을 지니도록 계획하였다.



DMS는 초승달 모양의 선형으로 가로 경관 형성과 필지 규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명동과 인사동의 장소감(sense of scale)을 계승하기 위한 계획적 노력을 하였다(김도년, 2015).¹⁹⁾ 사진 왼쪽은 블록별 용도 및 사업 현황(2012. 12. 기준), 오른쪽은 DMS 주요 노드. <출처> 서울산업통상진흥원(2013) 및 홈페이지

DMS 블록별 Node²⁰⁾

구분		설명
A블록	Experimental Park	DMC 입주기업의 첨단기술상품 시연 및 대규모 이벤트용 다목적 공간
B블록	IT-Art Park	디지털환경조형, 비디오아트, 홀로그래픽 등 IT 이용 예술품 전시공간
C블록	Media Plaza	DMC의 중심으로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교차하고 대규모 공개공지 조성
D블록	Exhibition Plaza	DMC의 관문이 되는 공간으로서 만남과 교류가 가능한 상징적 광장

DMS는 DMC단지 내 각 블록별 특성 및 테마에 따라 4개의 주요 Node로 구분된다.

- A블록 : Experimental Park. 대부분 주거, 교육 및 업무시설들이 입지.
- B블록 : IT-Art Park. 디지털환경조형, 비디오 아트, 홀로그래픽 등 IT를 이용한 예술품 전시공원.
- C블록 : Media Park. 디지털문화의 발산지, MBC글로벌미디어센터, 누리꿈스퀘어, 문화콘텐츠

17) <https://ko.wikipedia.org/wiki/디지털미디어시티>

18) 이하 서울산업통상진흥원(2013). 디지털 미디어 시티 10년사 및 발전방향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MONO1201519800>

19) 김도년(2015).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조성

20) 서울산업진흥원 <https://www.sba.seoul.kr/kr/sbst15h1#business03>

츠센터, 디지털매직스페이스의 기능과 공개공지, 건물 전면을 활용하여 디지털미디어의 체험, 생산, 교육, 연구, 테스트베드(실험), 쇼케이스(전시) 등이 이루어지며 다채로운 국제 규모의 이벤트와 풍성한 상호 교감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MBC글로벌미디어센터, 누리꿈스퀘어, 문화콘텐츠센터, 디지털매직스페이스가 입지한 DMC의 중심 장소로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교차하고 대규모 공개공지(空地)가 조성되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이다.

이 지역은 디지털미디어의 생산, 제작, 판매,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되어 살아있는 실험실이자 테스트베드, 쇼케이스로 계획되었다. DMC 이벤트의 중심 장소이며 거리응원이나 온라인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에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 있다. DMS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변의 MBC글로벌미디어센터, 문화콘텐츠센터, 누리꿈스퀘어, KGIT센터의 공개공지, 1층의 용도가 연계되어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창출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조성될 것이다.(DMC 걸쳐오픈의 야외무대로 활용되고 있음)

○ D블록 : Exhibition Plaza. DMS와 수색역-서울라이트-월드컵공원-한강이 연결되는 가로와의 접점.

(3) 투자자 인센티브 제도²¹⁾

○ 저렴한 토지가격: DMC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가장 큰 토지공급 인센티브는 토지매입가격 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점시설과 권장시설의 경우 시가 대비 50-70% 수준인 감정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렴한 토지가격이 DMC의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

○ 매각대금 분할납부제 도입: 중점유치시설과 권장유치시설로서 일정규모 이상을 매입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매입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DMC 단지의 택지 분양 촉진 및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택지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업종 중소기업 지원: DMC 특성에 맞는 디지털미디어 중소기업들을 조기에 집적시키기 위해 저렴한 임대사무실 제공. 관련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금융지원, 입주기업지원 등의 혜택을 받음

DMC 토지 공급 전략

	중점시설	권장시설	일반시설
공급대상	지정시설(공공기관) -해외 교육연구시설(MLE) -공공지원시설 : 문화콘텐츠진흥원 비지정시설 -방송시설 : 공중파방송국 유치 -교육연구시설 : 미디어 관련 연구소 -산학연시설 : IT 기초연구 관련	개발사업자 기업(실수요자)	지정시설 -호텔, 주상복합시설, 상업위락, 종교시설, 공공시설(공공의청사) 비지정시설 -필지별 개별업체 등
공급가격	지정시설 : 조성원가 비지정시설 :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나 감정가격(도시형공장) 조성원가(공공시설)

<출처> 김도년(2015)

(4) DMC 사업 차질 사례

○ 랜드마크 빌딩 건립 지연: DMC단지 내 F블록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빌딩 용지는 약 37,274m²

21) 서울시(2014). 정책명: 상암DMC단지 조성

의 규모로 업무, 숙박, 주거, 전시, 상업, 공공, 문화, 집회시설 용도로 지정되어있다. 2004년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택지공급을 하였으나 신청업체들이 DMC 사업목적에 부적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2008년 랜드마크 용지공급을 공고하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09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및 지속된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2012년 6월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2012년 6월말 랜드마크 재공급을 포함한 잔여용지 공급에 관하여 재검토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DMC랜드마크 용지 재공급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에 재공고할 예정이다. 2021년 현재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랜드마크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²²⁾

○ 교육연구기관 유치·운영 실패: MIT(미국) 미디어랩, 한독(韓獨)산학협동단지(KGIT), Virginia Tech 및 Carnegie-Mellon 대학(미국)

(5) DMC 육성 과제²³⁾

○ 상암DMC단지는 중견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현재 상암DMC는 미디어 분야 대기업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미디어 분야 지원기관이 소재해 있어,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미디어 집적단지의 위상을 갖고 있다. MBC, SBS, 교통방송 등의 공중파 방송사와 TvN, Olive 등 다중 케이블채널을 소유한 CJ E&M 등의 미디어 분야 대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NIPA의 누리꿈 스퀘어, KCA의 스마트미디어센터 등이 위치해 있으며, 서울 산업진흥원과 서울시 소유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운영 중인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S-plex 등이 소재해 있다.

그런데 상암DMC는 다른 지역이나 기업과 연결되지 않은 '중견기업의 섬'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첫째, 상암DMC의 다수 입주자들이 기존 미디어 기술 시장의 중견기업인데, 상암 단지 내에서 기업 간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둘째, 초기 개발자 그룹이나 스타트업이 상암DMC에 입주하기에는 민간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공공 입주시설에 진입하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첨단산업센터, 누리꿈 스퀘어 등의 공공지원시설 기업은 어느 정도 매출액 기준이나 R&D 비용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고 체험공간이 없어, 미디어에 관심 있는 개발자나 시민이 방문하기 어려워 새롭게 개발된 콘텐츠나 최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상암DMC는 중견기업, 교류가 없는 조용한 단지, 저녁이나 주말에는 행한 업무시설 지역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 전환 방향: 원스톱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

상암DMC를 '중견기업의 섬'에서 신생·중소 콘텐츠업체에게 원스톱 올인원(one-stop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로 재편하여 거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상암DMC가 신규 개발된 콘텐츠의 테스트베드이자 성지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상암DMC 페스티벌(DMCF)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스마트콘텐츠 영화제(웹드라마, VR영화, VR콘텐츠 등) 개최를 추진하며, 상암DMC 내부나 인근에 도심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콘텐츠업체의 창업과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 뉴데일리 2021. 4. 21.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에 '상암DMC' 랜드마크' 기대감 ↑...집값 '들쭉' 조짐: 2009년 사업 착수됐지만 3년 만에 무산/오세훈 시장 취임에 사업 추진 속도 전망/주변 단지선 매물 거두기 현상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21/2021042100161.html>

23)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2018); 정책리포트(2019).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활성화 방향

(6) 2021년도 활성화 계획²⁴⁾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 신성장 동력 창출

- 입주지원/기술개발/실증까지 스마트미디어기술이 DMC에 구현되는 지원시스템 구축
- AR/VR 선도시설(기기·서비스의 평가 및 실증공간) 조성하여 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

구분		DMC
市 정책과제		디지털콘텐츠 기술 융합거점
중장기 목표		글로벌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로 도약
2021년 목표	총괄	스마트미디어 기반 구축 및 산업 확산
	거버넌스	AR·VR 실증 협력체계 운영, 입주기업협의회 협력 등
	협력체계	KEA/KETI(실증사업), DMC거버넌스 등
	네트워킹	'spark@DMC' 기반 기업 커뮤니티 활성화
	기업지원	AR/VR센터 실증 및 상용화 지원
	특화전략	PLAY LAB, 실증기반 중심 AR·VR 중점지원

(7) 시사점

-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한 신도시(200만평) 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M&E) 클러스터(17.2만평)
- 장기간 대규모 투자: 2002~2010년, 1조 700억원, 현재 활성화 단계
- 선도사업으로 단지 중심가로(街路)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조성
- 중점시설로 방송시설을 유치하여 대형 언론사(자회사) 집적: KBS미디어센터, MBC와 MBC미디어센터, SBS프리즘타워, YTN과 뉴스퀘어,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 중앙일보와 JTBC, tbs교통방송, 국악방송
- 다른 지역이나 기업과 연결되지 않은 '중견기업의 섬'이라는 비판: 교류가 없는 조용한 단지, 저녁이나 주말에는 행한 업무시설 지역의 이미지

2) 고양 방송영상밸리²⁵⁾

(1) 사업 개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는 고양의 방송 및 영상자원과 함께 상암미디어시티 및 덕은미디어밸리와 연계하여 미래 방송영상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방송영상밸리의 총 사업기간은 2019~2023년까지로 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이다. 면적은 약 70만㎡(약 21만평)이며 사업비는 약 6,7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 공동사업으로 시행되며 방송 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 등의 생산, 유통, 소비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문화창조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세계인이 교류하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한류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울리는 매력적인 복합주거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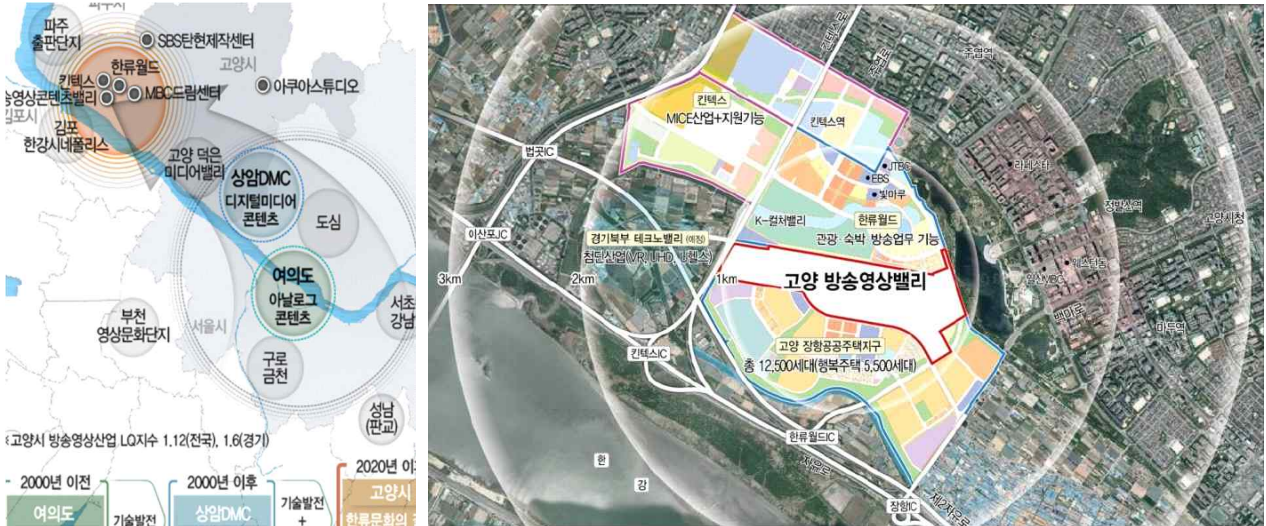
방송제작센터(약 17만㎡), 업무·도시지원시설(약 6만㎡), 주상복합(약 14만㎡), 공원·녹지·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약 30만㎡)로 구성된다. 방송제작센터와 지원시설에는 국내 주요 방송사의 스

24) 서울산업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2021. 2. 26. 서울시의회 보고)

25) 고양시정연구원(2021).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

튜디오와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2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조성이 끝나면 일자리 3만여개, 생산유발효과는 약 4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방송영상문화산업 클러스터<左>와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위치도<右>



<출처> 고양시(2019.12).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 고양시정연구원(2021) 재인용.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2019. 5. 30). <http://www.greenpostkorea.co.kr>; 고양시정연구원(2021) 재인용.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개요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7번지 일원
면적	약 70만㎡ (약 21만평)
사업기간	2019~2023년
사업비	약 6,738억원
사업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사업 시행
도입기능	방송사 및 방송시설, 주상복합시설, 방송영상 관련 기업, 음반사, 투자회사 등

<출처>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2021) 재인용 정리.

(2) 추진 경위

2019년 6월 경기도, 고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6월 고양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7월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였다. 이후 2020년 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다. 2020년 3월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계획이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추진 경위

연월	내용
2019.06	업무협약서(경기도, 고양시, 경기도공) 및 공동사업시행협약서(경기도, 경기도공) 체결
2019.06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고양시 고시 제2019-196호)
2019.07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20.02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2020.03	보상 기본조사 착수
2021.	상반기 공사착공(예정)
2023.12.	공사 준공(예정)

<출처> 경기주택도시공사 <http://www.gh.or.kr/business/city/city06.do>; 고양시정연구원(2021) 재인용.

(3) 목표 및 전략 설정

고양시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는 약 매출액 15,385억원, 사업체 수 2,351개 및 종사자 수 10,855명으로 예측되어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 1위, 종사자 수 및 매출액 2위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문화인프라 구축사업과 문화 체험 및 교류를 통해 차세대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서 역할과 방송영상 관련 창업 스타트업의 육성이 기대된다. 방송영상밸리 내 남북한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센터를 구축하고, 통일연구기관 유치와 남북 간 광역교통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 대비 남북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공동체 실현과 남북긴장 완화 등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양시 도시마케팅을 위한 제언 ⑧ 글로벌 미디어시티 고양으로 발돋움하려면²⁶⁾

서울 여의도, 상암동 디지털미디어단지에 이어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메카가 될 고양방송영상밸리가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고양시에는 SBS, EBS, JTBC 등 주요 방송사의 제작센터와 스튜디오가 이미 들어섰고, 고양방송영상밸리가 완공되면 기타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사와 다양한 방송·영상제작업체들의 추가 입성이 예상돼 명실공히 국내에서 대표적인 ‘방송영상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방송영상밸리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하지만 ‘무늬만 방송영상단지’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현실이다. 방송영상산업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전체 면적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파트, 일반주거단지, 상업시설, 학교 등 지원시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선투자자가 불가피하기에 사업비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킨텍스 전시장 인근에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들어선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의 선례를 보면 그런 걱정스런 시선도 이해할만 하다. 방송영상산업이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이끌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경쟁력 있는 국제 미디어 대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디어산업으로 도시 경쟁력 높이려면: 세계적인 미디어시티로 뉴욕, 맨체스터, 두바이가 손꼽힌다. 뉴욕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미디어산업 대표 도시이기에 두말할 나위 없지만, 영국 맨체스터도 BBC를 비롯해 많은 방송미디어들이 들어서며 영국 미디어산업의 메카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방송미디어 전문 인력이 몰려들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가 생산·유통되며 영국의 디지털 미디어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우뚝 선 두바이도 쇼핑, 관광산업 외 도시의 경쟁력을 다지는 또 다른 축은 미디어산업이다. 여의도,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

26) 고양신문 2021. 8. 30.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88>

티(DMC)에 이어 곧 바통을 이어받을 고양시가 그려나갈 국제 방송영상·미디어시티는 방송·미디어 관련 산업뿐 아니라 주변 산업과의 네트워크가 세포망처럼 골고루 연결되고 소통하며 결합해서 발전해야 한다. 방송영상밸리에 추가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입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측면 지원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미디어시티 도약을 위한 제안: 먼저 향후 고양 미디어시티의 활력소가 될 국제적 콘텐츠 마켓이 필요하다. 부산은 이미 매년 국제적 규모의 부산방송영상마켓(BBWW)과 부산콘텐츠마켓(BCM)이 개최하며 국내 콘텐츠마켓을 주도하고 있다. 고양시도 2025년 아시아 5위 규모로 확장되는 킨텍스 전시장을 활용해 세계적 규모의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을 개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고양시는 2026년까지 영화 ‘기생충’ 마을 세트장을 다시 복원하고 고양아쿠아스튜디오를 포함한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특화 영화(영상)제를 기획할 수도 있다. 수상(水上) 전문영화제는 어떨까. 바다, 강, 호수 등 수상촬영이 주(主) 모티브인 영화제를 말한다. 첨단 그래픽(CG), 가상현실(AR·VR), 3D(4D), 360도 동영상 등 특수효과 영화제는 어떨까. 예전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나 감상할 만한 아이템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방송영상밸리 주요 거리에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홍콩 스타의 거리처럼 매력적인 특화 거리(골목)를 만들어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도 준비하자. 유명 스타 거리 이외에도 감독, 작가, 스태프 주인공인 거리도 좋은 아이템이다. 아직은 희망사항이겠지만 이쯤 되면 고양방송영상밸리를 기반으로 고양시가 세계적 미디어시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양시가 종합적인 ‘미디어마케팅’ 전략을 준비해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고양방송영상밸리 외 창작 문화콘텐츠, 촬영세트장, 고양시 곳곳의 로케이션 장소, 작품, 배우 등 수 많은 뒷이야기들이 바로 스토리텔링 관광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고양시 마이스(MICE)산업과 방송영상산업은 미래 고양시를 살리는 최대 먹거리이자 관광산업의 보루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고 준비할 때다.

■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20일 기공식 열려²⁷⁾

고양시는 경기도와 20일, 방송영상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회의원, 국내 주요 방송 영화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는 한강 축을 따라 경기 서북부 방송·영상·문화기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기획-제작-유통-소비-확산되는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으로 고양시 자족기능 확충이 목적이다.

2019년 6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인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난 4월 마무리, 이날 첫 삽을 뜨게 됐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 701,984㎡에 총 사업비 6,738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지구 내 방송용지에 주요 방송국 및 제작센터입주로 2,342억원의 생산 유발 및 1,423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영상밸리 주변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 제3전시장·CJ라이브시티·IP융복합센터와도 연계된다. 입주 기업 간 자원공유 등 시너지 효과로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

27) http://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90&q_bbscttSn=20210520174622782

르고 있다.

이번 기공식 이후에는 지구 내 지장물 철거와 이주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해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고양시 보도자료 2021. 5. 20.)

■ 고양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인가 고시²⁸⁾

‘2,342억원의 생산 유발, 1,42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고양시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는 한강축을 따라 방송·영상·문화기능의 클러스터를 경기서북부권역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항동·대화동 일원 701,984㎡에 조성된다. 총 예산 6,700억원이 투입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2019년 6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의 전체 면적 중 약 25%에 해당하는 168,466㎡는 방송시설용지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요 방송국 및 제작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면적 중 약 8%에 해당하는 54,363㎡는 업무지원과 도시지원을 위한 용지로 계획됐다. 시는 2,342억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761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432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로 방송영상밸리가 드디어 첫삽을 뜨게 됐다”며, “방송영상밸리를 필두로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 제3전시장·CJ라이브시티도 올해 착공예정으로, 자족도시를 향한 고양시의 향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바탕으로 올 해 하반기에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며, 22년 부지공급을 거쳐 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고양시 보도자료 2021. 5. 6.)

(4) 시사점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방송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 복합주거공간 조성(21만평)
- 단기간 대규모 투자 진행 중: 2019~2023년, 6,738억원
- 국제 미디어 도시 육성을 목표로 방송영상산업 거점 클러스터 조성: 방송사 스튜디오와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중점 유치
- ‘무늬만 방송영상단지’ 우려: 핵심인 방송영상산업시설 부지는 24%에 불과하고 업무, 주거, 복합시설 부지가 대부분

3) 대전 스튜디오큐브

(1) 사업 개요²⁹⁾

스튜디오큐브(Studio CUBE)는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총 사업비 797억원(국비 787억원·시비 10억원)을 들여 2017년 설립한 공공 제작 인프라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인 3,755㎡(1,136평) 스튜디오를 비롯한 중대형 스튜디오, 4면 크로마키가 설치된 특수효과 스튜디오, 법정·병원 등 오픈세트가 상시 구비된 특수시설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

28) http://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90&q_bbscttSn=20210506213116822

29)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cop/faclinfo/submain.do?menuNo=200959>

HD드라마타운에서 메가스튜디오(mega studio)로, 다시 스튜디오큐브로 명칭이 자주 변경됐으며, 시설 확충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차단된 운영으로 인하여 대전의 '외딴섬'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스튜디오큐브 이외에 정부가 설립한 공공 제작 인프라로는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구축한 DMS(디지털매직스페이스)도 있다.

대전 스튜디오큐브 개요

구분	내용
위치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엑스포과학공원 내
면적	부지 66,115㎡(2만평) / 연면적 32,040㎡(9,692평, 지하1층 지상2층)
사업기간	2011~2017년
사업비	797억원(국비 787억원, 시비 10억원)
주요시설	촬영스튜디오, 제작지원시설, 후생·운영시설 등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9. 22. 인용 정리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정부는 2009년 1월 21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 'HD드라마타운' 건립을 골자로 한 드라마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동년 5월 26일 발표된 정부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서는 대덕연구단지의 첨단영상제작기술(CG, 3D)과 드라마를 연계한 HD드라마타운 구축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 포함시켰다.³⁰⁾ 여기에서 드라마타운은 미디어 제작 집적단지(Media Production Complex), 즉 방송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영상제작 인프라 확충사업을 말한다. '미디어단지'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용례이다.



대전 스튜디오큐브 개관식 모습<左>과 전경 <출처> 대전일보 2017. 9. 26.,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 [스튜디오 큐브 완공 4년] 지역손익 따져보니 대전은 금싸라기 땅만 내준 꼴³¹⁾

대전 영상산업 부흥을 위해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한 '스튜디오큐브'가 완공 4년이 지나도록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첫 삽을 뜰 당시에만 해도 1만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 2300억원의 경제효과 등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지만, 지금은 강화된 보완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엑스포과학공원 내 외딴 섬이 돼 버렸다.

30) 이정근 등(2010). 한류 드라마 중심 미디어 제작 집적단지 조성의 수요에 관한 실증적 분석.

31) 충청투데이 2021. 7. 21.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535>

■ 대전 스튜디오큐브에 ‘수상해양 복합촬영장’ 짓는다³²⁾

국내 최대규모 촬영 스튜디오·공공 제작시설인 ‘스튜디오큐브’ 부지에 수상해양 복합촬영장을 짓는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수상해양 복합촬영장은 대전 유성구 소재 스튜디오큐브 부지 내에 예산 총 78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6731㎡, 건축 연면적 1609.66㎡(지상 2층) 규모로 약 1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 [여론광장] 스튜디오 큐브, 오래된 여정의 시작³³⁾

스튜디오 큐브 사업은 2009년 1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2009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직접 부지를 방문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2010년 9월 마침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책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공모를 받는 형식으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반대로 지역에서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됐다. 스튜디오 큐브의 진정한 완성은 대전이 가진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력과 스튜디오 큐브 문화예술의 융합이다. 스튜디오 큐브를 더 높은 차원에서 활용할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같이 고민해야 한다. 문화와 기술이 융합한 아이디어를 대전에서도 (대덕연구단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스튜디오 큐브의 개관은) 대전에게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 국내 최대 방송영상제작 전문시설 스튜디오 큐브 대전서 개관³⁴⁾

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영상제작 전문시설인 스튜디오 큐브가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5일 오후 3시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는 스튜디오 큐브 본관에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배우 현빈, 영화감독 김성훈 등 주요 인사와 방송 및 영상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스튜디오 큐브는 총 사업비 797억원(국비 787억원·시비 10억원)이 투입됐으며 6만6115㎡의 부지에 연면적 3만204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 방송영상제작 전문시설이다. 기존 국내 최대 스튜디오인 경기도 파주 원방 스튜디오(2300㎡)에 비해 2배 이상 넓은 규모이다.

■ 대전시, 첨단 영상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댐걸음

스튜디오 큐브는 엑스포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유치한 국가기관 중에는 처음 준공되는 시설이다. 대전시는 향후 스튜디오 큐브 운영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첨단 영상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대전시 보도자료 2017. 7. 26.)

■ [편집국에서] 대전메가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³⁵⁾

지난달 28일 대전 메가스튜디오가 준공됐지만, 시설 명칭을 둘러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공모전까지 열어 새 명칭을 선정했건만, 또다시 ‘스튜디오 큐브’라는 이름으로 재차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의 제작 인프라 스튜디오라는 이미지를 상징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란다.

32) 헤럴드경제 2021. 10. 2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6000474>

33) 대전일보 2017. 10. 15.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81504

34) 대전일보 2017. 9. 26.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80464

35) 중도일보 2017. 7. 5.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70705000043513>

■ HD드라마타운 새 이름에 ‘대전메가스튜디오’³⁶⁾

다음 달 문을 열 ‘HD드라마타운’의 새 이름으로 ‘대전메가스튜디오(Daejeon mega studio)’가 최종 선정됐다.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규모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제작 기술 개발을 위한 HD드라마타운의 새 이름을 짓는 명칭 공모전 선정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드라마타운은 다음달 개장하게 된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 기지를 마련하겠다고 한 지 7년만이다.

■ HD 드라마타운 첫발 내딛다³⁷⁾

대전시가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대전시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비롯한 영상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이번 HD 드라마타운 유치가 대전을 신 한류 중심지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 시사점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공공 제작 인프라(2만평, 797억원)
- 조성 기간(2011~2017년) 중 잦은 명칭 변경으로 사업의 신뢰 훼손
- ‘언론단지’와 구별되는 ‘미디어단지(Media Production Complex)’의 용례
- 정부기관이 지역사회와 유리된 운영을 함으로써 대전의 ‘외딴섬’이란 비판

4) 실패 사례: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1) 사업 개요

■ 송도국제도시 밑그림을 그린다

본래 송도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 끝에 낙점을 받은 곳이다. 1997년 6월 최기선 인천시장과 고건 국무총리 등은 송도 미디어 밸리(media valley)에 소프트웨어 파크 등 76만평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등을 겪으면서 미디어밸리는 파산하였다.³⁸⁾ "(네덜란드)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와 협력해 송도국제도시에 멀티미디어의 '미디어'와 실리콘밸리의 '밸리'를 따서 '미디어밸리'라는 이름의 정보통신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지요. 그런데 IMF 때문에..." 청사진을 꿈꿨던 송도국제도시는 IMF 위기를 맞으며 전면 중단되고 만다. 새로운 기업 포스코와 게일이 등장하며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은 변경된다.³⁹⁾

36) 중도일보 2017. 5. 7.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70507000020557>

37) 충청뉴스 2011. 4. 29.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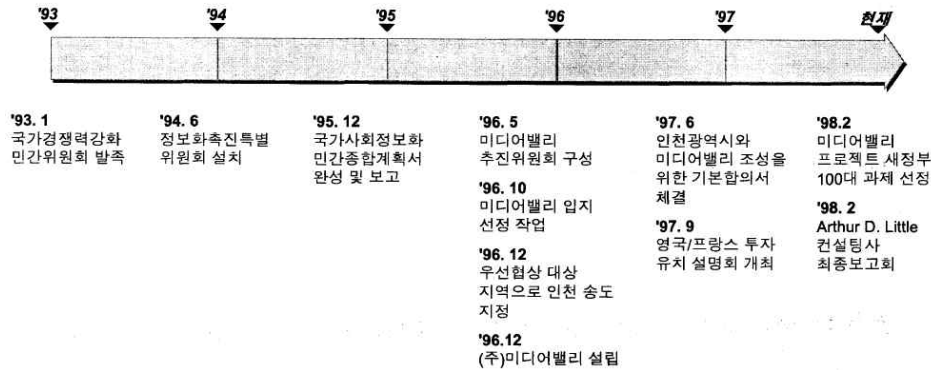
38) 경인일보 2017. 8. 21. [월요논단] 한국판 실리콘 밸리와 송도의 마귀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820010005819>

39) 인천일보 2019. 11. 11 [없었던 섬 송도] 송도국제도시 밑그림을 그린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0574>

송도 미디어밸리 추진 경위⁴⁰⁾

미디어밸리의 비전 미디어밸리의 추진경과

미디어밸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의 '정보화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하여 12개 지자체로부터의 제안서 검토 결과 인천 송도에 조성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미디어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⁴¹⁾

인천 송도신도시에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들어선다. 미디어밸리의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난 1년 동안 전개됐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은 마침내 끝났다. 지난 96년 6월 민간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미디어 밸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로 미디어 밸리를 조성기로 발표하면서부터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이 촉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디어밸리 유치에 따른 엄청난 산업연관효과를 기대하고 이 단지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치서명에 들어갔으며 도시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유치의욕을 불사르기도 했다. 미디어밸리의 유치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주시, 대전시, 인천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춘천시 등 중·소 자치단체들까지 포함 20여군데에 이르렀다.

(2) 시사점

-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정보통신기술산업단지 조성)이 경제 위기로 무산
-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유치전: 20여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원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사례

(1)사업 개요

도청 이전을 계기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약칭 도청이전법(2008. 3. 28. 제정)⁴²⁾에 근거하여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

40) 서진구(1998). 첨단지식산업단지로서의 미디어밸리 추진전략. 저자는 당시 (주)미디어밸리 대표이사이다. 입주기업 협의회 82개 회원사는 대부분 정보통신사이고 언론사는 없다.

41) 신문과방송 제320호(1997. 8.)

4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청이전법)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 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

다. 전남도의 남악신도시(광주→목포·무안)를 시발로 하여 충남도의 내포신도시(대전→홍성·예산), 경기도의 광교신도시(수원→수원·용인), 경북도의 경북도청신도시(대구→안동·예천)(이상 ~~도청~~ 이전 시기 順)가 그러하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의 개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광역시 소재 언론사를 포함한 기관·단체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봤니? 신도시 내 명소 속속 생겨나⁴³⁾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가 늘고 상업·편의시설도 갖춰지면서 신도시 내 명소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미디어 거리, 만남의 광장, 건강거리(황톳길) 등 테마형 거리가 조성되는가 하면 다소 딱딱했던 경북도청사도 주민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청 서문 쪽 도로 인근에는 신문사 3곳, 방송사 1곳 등 언론사 사무실이 촘촘히 들어서 '미디어 거리'로 불리고 있다. 전규영 경북도 신도시조성과정은 "경북도청신도시는 조성 3년 만에 상주인구가 2만명이 넘고 유동인구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 명소가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매일신문에 보도된 경북도청 서문 앞 미디어 거리(경북 안동시 풍천면 풍요6길). 영남일보와 TBC대구방송 사무실의 간판이 보인다. <출처> 네이버·다음 지도 캡처

■ 문닫는 경북도청 서문 식당가…“목요일 밤, 불꺼진 상가 임대 스티커만 덕지덕지”⁴⁴⁾

경북도청 서문 식당가가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 11일 밤 9시 쯤 찾은 안동 풍천면 갈전리 풍요6길 일원. 1km 남짓의 이 거리는 경북도청 서문과 마주하고 있어 식당·카페 등이 밀집해 있다. 도청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안동·예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일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경북도청 서문 상가가 쭉 죽은 듯하다. 경북도청·경북경찰청을 비롯해 주변에 농협경북본부·경북도교육청 등 기관이 밀집해 있는 이곳 식당가가 문을 닫은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임대료 때문이다.

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43) 매일신문(대구) 2019. 8. 20. <http://news.imaeil.com/page/view/2019082013524615336>

44) 영남일보 2020. 6. 19.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617010002587>

경북도청신도시 유관기관 유치 계획

구분	전체			언론기관		
	계	대구 소재	경북 소재	계	대구 소재	경북 소재
계	219	139	80	7	6(5)	1(2)
유치목표	130	96	34	6	5(4)	1(2)
이전희망	107	81	26	6	5(4)	1(2)
2016년 이전 완료						경북매일
2017년 하반기 이전					대구방송 대구일보	경안일보
2019년 이후 이전					대구극동방송 대구CBS	

<보기> 괄호(적색)는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숫자임. <출처> 경상북도 도청이전 백서Ⅱ(2016) 인용 정리.

대구·경북 지역 언론기관 조직 현황

지역/매체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안일보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방송	대구CBS	대구극동방송
대구	대구본부	대구본부	-	본사	본사	본사	본사	지사	지사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도청본사 (본부급)	북부분부	-	경북지사	경북본사 (국장급)	경북본사 (국장급)	경북본부	-	-
경북 안동	-	-	본사	-	-	-	-	-	-
경북 포항	본사	본사	-	-	-	-	-	-	-

<보기> 경안일보는 2016년 도청이 이전하기 전인 2011년 경북 안동에서 창간.

■ KBS 충남방송국 설립 ‘빨간불’…"수신료 인상 우선"⁴⁵⁾

<출처> 디트뉴스24 2021. 1. 7.; 2020. 11. 20.⁴⁶⁾

충남도가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재정악화에 신규 투자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KBS는 수신료 현실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남방송국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과기정통위 조승래 의원실(대전 유성갑)에 따르면 KBS는 최근 조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KBS 충남방송국 설립계획서’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충남방송국 설립 계획은 없었다. KBS는 종합의견에서 “38년째 수신료 동결, 지상파 광고시장 대폭 축소 등 이유로 재

45) 디트뉴스24 2020. 11. 16.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147>

46)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370>: 592554

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포신도시 방송국 설립 요청 건과 관련해 공사는 수신료 현실화 등 정책과제 해결과 연계해 내포방송센터(가칭) 건립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우선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재정 여건이 나아져야 충남방송국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2) 시사점

- 광역시 소재 도청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신도시 개발 사례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도시의 여건 및 언론사 집적단지 조성의 실제

2. 해외 사례

- 미국 행정수도 워싱턴D.C. 소재 미디어 현황

1) 워싱턴 D.C.

워싱턴 D.C.(Washington, D.C.)는 미국의 수도다. 정식 명칭은 컬럼비아 구(District of Columbia)다. 조지 워싱턴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미국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행정구역이다. 좁지만, 국제적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있는 세계 도시이며, 금융 센터로서도 중요성이 높다. 수도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계획도시다.

워싱턴 D.C.는 포토맥 강의 동쪽 유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포토맥 강을 경계로 버지니아와 접하고 그 이외 방향으로는 메릴랜드에 둘러싸여 있다. 1790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프랑스의 피에르 샤를 랑팡을 초청하여 새 수도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현재 잘 정비한 시원한 거리는 피에르 랑팡의 설계를 골격으로 하여 이어받은 것이다. 인구는 약 70만 명인데, 주변 교외 지역에서 드나드는 통근자를 고려하면 주중 인구는 100만이 넘는다. 컬럼비아 구역을 포괄하는 워싱턴 대도시권의 인구는 약 620만 명으로, 미국의 대도시권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이다.

수많은 국가 기념물과 박물관과 더불어 미국 연방 정부의 3부의 중심 관청이 모두 이곳에 있다. 워싱턴 D.C.에는 174개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 미주 기구, 아메리칸 개발은행, 범아메리카 의료기구의 본부가 있다. 무역협회, 로비 단체, 직능 단체 등 여러 기관의 본부도 이곳에 있다. 워싱턴 기념탑(555피트, 약 169.3m)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뉴욕과는 달리 초고층 건물이 드물다. 백악관, 펜타곤, 연방 의사당 등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들이 소재해 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에는 Senate Daily Press Gallery와 US Senate Press Photographers' Gallery가 설치되어 있어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 <U.S. 뉴스&월드 리포트>, <워싱턴 시티 페이퍼>가 있으며 인근 버지니아주에 <USA 투데이>가 있다.

2) The Senate Daily Press Gallery

상원과 하원 정기 간행물 갤러리, 상원과 하원 라디오와 텔레비전 갤러리, 상원 사진기자 갤러리가 있다. The Senate Daily Press Gallery는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건물에 있다. 갤러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원을 지원하고 상원 활동에 대해 취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갤러리에는 상원과 주변 사무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기자석이 있다. 갤러리 직원은 기자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투표를 집계하고, 상원의 기자 회견 및 청문회 보도를 조정한다.

기자들은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국민들에게 전달한다. 하원과 상원은 1877년에 공식 언론 갤러리를 설립했다. Senate Daily Press Gallery는 미국 상원의 상임규칙 XXXIII에 따라 운영된다. 이 규칙에 따라 하원의장과 상원 위원회는 모든 언론 갤러리에 대한 최종 권한을 유지한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신문이 의회를 다루었다. 헨리 클레이는 1841년에 상원 최초의 기자 갤러리를 설립하여 워싱턴 일간 신문에 배정했고 입장권이 없는 기자들은 일반 대중과 함께 자리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현장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1877년에 하원과 상원은 언론 갤러리 회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특파원 위원회를 만들었

다. The Official Congressional Directory는 1880년에 접근이 허가된 86명의 특파원 목록을 발표했다. 갤러리는 현재 일간지,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언론사, 언론 사진기자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에는 자체 특파원 위원회가 있다. 2008년에 갤러리는 통로를 넓히고 새로운 책상을 추가하고 사무실을 현대화하는 전면적인 개조작업이 있었다.

오늘날 의회 언론 갤러리는 언론인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언론 갤러리는 일반적으로 언론인의 자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갤러리는 특파원을 위한 국회 의사당 활동 공간을 유지하고 기자 회견, 청문회 및 기타 의회 행사에 대한 보도를 조정한다. 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언론에 취재 절차, 규칙, 수정 사항 및 입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원회 청문회, 증인 증언 및 마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언론인과의 회원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한다.

하원 및 상원 언론 갤러리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전국 정치 대회 및 대통령 취임식에서 일간 언론을 위한 준비 및 인증을 감독한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전문 직원은 상원의 규칙 및 관리에 관한 상원 위원회에 보고한다. 상원 갤러리는 상원과 하원 모두를 다루는 일간 신문, 유선 서비스 및 전자 뉴스 조직에 대한 인증을 처리한다.

지원자는 상임 기자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 위원회는 갤러리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2년 임기로 선출된 5명의 언론인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언론단을 의회의 영향으로부터 격리시켜 언론단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갤러리 회원들이 동의한 규칙이 뉴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전문적 규범과 표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특파원 위원은 언론인으로 계속 고용되어야 한다.

데일리 프레스 갤러리의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자신이 평판이 좋은 진정한 기자”여야 한다. 상원과 하원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현장 접근이 필요한 위치에 있는 인정된 뉴스 조직의 정규직 또는 유급 특파원이어야 한다. 또한 워싱턴 D.C.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개인, 정당, 기업, 조직, 기관을 위한 로비 또는 유료 활동, 광고, 홍보 또는 판촉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기자 상임위원회가 인증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상원 언론 갤러리 사무실은 위원회와 언론인 사이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여 지원서, 지원 자료 또는 언론인이 제출한 수수료를 처리한다.

US Senate Press Photographers' Gallery, 즉 상원 보도사진 작가 갤러리는 진실한 뉴스 사진 작가의 자격을 인증하고 미국 상원과 하원의 사진 보도를 촉진하는 일을 담당한다. 사진 작가들에게 뉴스 이벤트 및 청문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 계획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다양한 언론 매체 소속의 300명 이상의 사진 작가로 구성된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갤러리 직원은 상원 상사와 규칙 및 관리에 관한 상원위원회의 후원 하에 미국 상원에서 고용한다.

국회의사당 내에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있으며 이곳에는 폭스뉴스와 NBC 뉴스, C-SPAN을 포함한 수많은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상주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3) 워싱턴 D.C.에 소재한 언론사들

(1)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간되는 신문 중 가장 큰 신문이며, 1877년에 창간된 가장 오래된 신문이기도 하다. 흔히 간단히 포스트(Post)라고 부른다. <뉴욕 타임즈>, <월 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일간지이며, 국제 기사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과 상원,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 대한 기사를 주로

게재하는 특징이 있다. 1961년에 뉴스워크를 자회사로 인수했다. 2013년 8월, 제프 베저스에게 매각되었다.

이 신문은 1877년 스틸슨 허치슨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1880년에 선데이 에디션이 추가되면서 1주에 7일 내내 출판되는 이 도시 최초의 신문이 되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밥 우드워드 기자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당시 대통령 닉슨의 측근들에 의해 숨겨졌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일이다. 이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워싱턴 타임스(The Washington Times)

<워싱턴 타임스>(The Washington Times)는 미국 워싱턴 D. C.에서 발행되는 종합 일간지이다. 1982년 문선명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재단에서 창간하였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은 워싱턴에서 발행되던 제2의 일간신문이던 워싱턴 스타가 폐간되자, 워싱턴 스타의 인력들을 영입하여 워싱턴 지역 제2의 일간신문을 표방하며 창간했다. 창간 당시 미국의 종합 일간지로는 드물게 1면 전면을 칼라로 배치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세계일보>, 일본의 <세카이닛보>, 라틴아메리카의 <티엠포스 델 문도> 등의 자매지가 있다.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한 언론으로 알려져 있으나, 하루 발행부수는 4만 부 가량에 불과하다. 이 신문은 문선명의 3남 문현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2010년 11월 대한민국의 통일그룹이 채무와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달러에 인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3) U.S. 뉴스&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U.S.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주간 미국 뉴스매거진이다. 원래 이름은 United States News였으나, 월드 리포트(World Report)와 병합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회사의 발행인이자 소유주는 모티머 주커만이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의 편집 인원은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뉴욕시의 데일리 뉴스 건물에 위치한 U.S. News & World Report, L.P.이다. 1933년에 United States News로 설립되었으며, 1948년에 World Report와 합병하였다. 데이비드 로런스(1888~1973년)가 이 잡지를 만든 사람이며 그의 직원에게 이 잡지를 팔았다. 주된 경쟁사로는 <타임>지와 <뉴스 위크>지가 있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의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학들의 순위를 매기는 기관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지고서부터다. 초기에 미국 대학만을 순위를 매겨 줄 세웠지만, 2014년부터는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가장 큰 대학 평가 기관이자 미국을 포함한 북미 교육계, 수험생들, 학부모들, 언론들이 입시에 가장 자주 참고하는 지표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학들이 대부분 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 기관의 대학 순위는 세계적인 인지도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4) 워싱턴 시티 페이퍼(Washington City Paper)

<워싱턴 시티 페이퍼>(Washington City Paper)는 미국의 대안 주간신문으로 워싱턴 D.C.와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유통되며, 2006년 기준으로 85,588부가 판매된다. 주로 사설은 지역 뉴스 및 예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8년의 판매 부수는 4만 7천부를 기록하였다.

워싱턴 시티 페이퍼는 볼티모어 시티 페이퍼의 소유주인 러스 스미스와 앨런 허쉬가 1981년 창

간하였다. 이후 1982년 1월 시티 페이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같은 해 12월 스미스와 허쉬는 80%를 시카고 리더 주식회사에 매각했다. 1988년 시카고 리더는 나머지 20%를 인수하였다. 2007년 7월 워싱턴 시티 페이퍼와 시카고 리더 모두 탬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로핑 체인에 매각됐다. 2012년 크리에이티브 로핑 애틀랜타와 워싱턴 시티페이퍼가 사우스콤 커뮤니케이션스에 인수됐다.

2017년 12월 21일, D.C. 지역의 벤처 투자가이자 자선가인 마크 아인이 시티 페이퍼를 인수했다. 아인은 신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알럼니 그룹 및 프렌즈 오브 워싱턴 시티 페이퍼라는 이름의 두 개의 그룹을 설립했다고 발표하였다.

5) USA 투데이

<USA 투데이>(USA Today)는 미국의 종합일간지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지로 발간되는 신문이다. 1982년 출판전문그룹 개닛에서 전국지를 표방하며 창간하였다. 미국의 유명 종합일간지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각 지방을 연고로 하여 발간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전국지로 발간한다는 전략은 매우 특색있는 것이었다. 또한 처음부터 간결한 기사와 화려한 그래픽, 사진 등으로 눈길을 끌어 곧 미국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 되었다. 최근 발행부수가 다소 감소하여, 2010년 3월 기준으로 일평균 약 180만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뒤지고 있다.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Fairfax)에서 발행하여 미국 전역에 배포된다. 페어팩스는 버지니아주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워싱턴 D.C.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2만명이 조금 넘는다. 창간 이후 34년간의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냈다.

6) 폭스 뉴스

Fox News는 미국 폭스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24시간 케이블 텔레비전 뉴스 채널이다. 1996년 10월 7일에 방송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시청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루퍼트 머독의 집중적인 투자와 특유의 보수주의 성향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 2002년부터 24시간 뉴스 전문 방송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CNN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매체로 매우 유명한 뉴스 방송 채널이다.

폭스 뉴스 채널은 프로그래밍과 폭스방송회사의 내용뿐 아니라 하루 최대 15시간의 생방송과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대표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폭스뉴스 본사에 의해 미국 뉴욕 1211가 록펠러 센터의 서쪽 연장선에 있는 6번가 가로변 스튜디오에서 방송된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폭스 뉴스의 워싱턴 디시 스튜디오⁴⁷⁾에서 방송된다. 그 스튜디오는 NBC 뉴스와 C-SPAN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나뉜 보증된 건물에 있는 유니언역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미국 의회에 위치한다. 오디오로 동시방송 되는 채널은 XM 위성라디오와 시리우스 위성라디오이다.

47)

V. 세종시로 이전 계획 중인 언론사 현황

1. 세종시와 협약 맺은 서울 언론사
2. 세종시와 협약 맺은 대전지역 언론사

■ 경향신문 보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확정으로 행정에 이어 입법 기능까지 강화되고 있는 세종시로 서울 등 외지에 본사를 둔 언론사의 진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세종시에 따르면 본사 이전 또는 본부 건설 등을 목표로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서울지역 언론사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MBC, YTN, MBN, EBS, SBS미디어넷 등 모두 9개에 이른다. 또 대전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TJB(대전방송)와 충청투데이도 세종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세종시 진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들 언론사는 세종시가 행정은 물론 입법 분야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세종 진출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확정으로 세종이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정치1번지로 받돋움하게 됨에 따라 세종 진출을 추진하는 언론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세종이 뉴스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고, 이에 따른 언론사의 취재망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지 때문이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미디어(언론)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행정-언론 사이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도시 가치를 높이고 국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복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세종진출을 추진하는 언론사의 본사 이전 또는 본부 건설 등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48) <https://www.khan.co.kr/local/Sejong/article/202110041022001>

1. 세종시와 협약 맺은 서울 언론사

1) 경향신문

1946년 10월 6일 경성천주교 재단에서 창간했다. ‘새로운 시대에 처한 보도계몽기관임’을 자부하며 진실보도를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초대 사장은 양기섭 신부, 부사장은 윤형중 신부, 주필은 정지용, 편집국장은 염상섭 등 신부와 문인들이 참여했다. 창간 당시의 발행부수는 3만부였으며, 1년 뒤 6만1300부로 늘어났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잠시 휴간했다가,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전선판’과 ‘서북판’을 발행했다. 이때 우리나라 종군기자 1호인 박성환을 배출했다. 1951년 1·4후퇴 때 대구에서 ‘이동전시판’을 발행하였고, 같은 해 4월 부산에서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속간했다. 1947년 1월 15일자 1면 칼럼 ‘여적’에 주둔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문제를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필자인 정지용이 미군 당국자와 ‘백골단’ 등 극우 단체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1952년에는 발췌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장기집권 기도를 강경하게 비판했으며, 본사가 우익폭력단 ‘땃벌떼’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1959년 이후로 자유당 독재체제가 굳어지자 반독재 노선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천주교도인 장면 부통령의 피습사건 이후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러한 <경향신문>의 자세는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20만 부의 발행 부수를 기록했다.

1959년 2월 4일 ‘여적’란에 실린 당시 국회의원 주요한의 “현 한국정세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력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전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미군정 법령 88호(신문과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조항, 1961. 12. 30 폐기)에 위반된다 하여 필자와 당시 사장 한창우가 2월 28일 기소되었고, 신문은 4월 30일 강제 폐간당했다. 이러한 조치에 불복하고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여 승소했으나, 정부는 폐간조치를 무기한 발행정지처분으로 바꾸어 발행을 막았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4월 27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간된 지 361일 만에 조간으로 속간되었다. 1962년 2월 경영권이 이준구에게 넘어가면서 천주교와의 관계를 끝낸 독립지가 되었다. 1964년 5월 13일 ‘난국 타개는 이것부터’라는 기사로 6·3비상계엄령 아래서 사장 이준구 등이 구속되었으며, 1965년 다시 이준구 등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1966년 4월 기아산업이 판권을 넘겨받았으며, 다시 1969년 4월 신진자동차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1974년 7월 24일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와 통합하고, 11월 1일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으로 개편했다. 1980년 언론통폐합에 따라 독립회사로 분리한 뒤, 1990년 8월 1일 한국화약그룹(지금의 한화그룹)과 합작했다. 1997년 4월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하면서 제호도 한글로 바꾸었으며, 1998년 3월 한화그룹으로부터 경영권 독립을 이루면서 사원주회사로 탈바꿈했다. 주주 중 사원이 96%를 차지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946년 창간 이래 성역 없는 비판정신과 휴머니즘을 제작 원칙으로 삼아 조간 주6회 발행되고 있다. 자매지로는 <레이디경향>, <주간경향>, <스포츠경향>, <경향비즈>가 있다. <레이디경향>은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선보이고 있는 여성 종합 월간지다. <주간경향>은 한 주 동안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을 조명하는 기사를 싣고 있으며, <스포츠경향>은 기존의 스포츠 신문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경향비즈>를 공식 개설하여 소비자 중심의 생활정보와 경제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사업으로 소방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공헌한 개인 혹은 단체를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추최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협약하여 도시민들에게 도시에서도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인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스포츠 사업으로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전국 고교 선수 대항전 성격의 대통령기 통일구간마라톤대회 주최하고 있으며, 1968년부터는 한국 축구 중흥 차원에서 고교축구 육성을 위해 전국 고교 축구단을 대상으로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문화 사업으로는 이화 경향 음악 콩쿠르, 경향 실용 음악 콩쿠르 등의 음악 분야의 경연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밖에 외교포럼과 경제교육 프로젝트 등을 주관하고 있다. 본사가 소재한 정동 일대에서 매년 10월 열리는 정동문화축제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경향 시민대학과 경향 저널리즘스쿨 등의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시사업으로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서울시와 공동 주최하고 있다.

2)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의 역사는 1975년 동아일보·조선일보 해직기자들로 구성된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회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9월 1일, 투쟁위원회는 종로구 안국동에서 창간발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창간 작업에 나섰다. 준비위원회는 신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했고, 10월 30일에는 명동에서 창간발기인 대회를 열어 각계를 대표하는 56인으로 창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 대표로 전(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송건호와 변호사 이돈명이 추대되었다.

모금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 위원회는 9차례에 걸쳐 <한겨레신문 소식지>를 발간했고, 이 소식지는 모금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데 기여를 했다. 1988년 2월, 창간 기금 모금 운동의 결과로서 50억 원이 조달되었다. 이후 5월 15일, 36면으로 구성된 <한겨레신문>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종합 일간지로서는 전면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을 실시한 최초의 신문이었다. 또한 한국 언론 사상 개별 언론사 최초로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편집위원장도 기자들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도를 갖추었다.

창간호에서 ‘한겨레신문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발표했는데, 신문 제작과 관련된 금품수수나 개인을 위해 신문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1988년 8월 한국언론계 최초로 편집위원장 직선제를 실시해 제2대 편집위원장 장운환을 뽑았으며 사내 민주화 실현을 지향했다. <한겨레신문>은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민족의 통일을 목표로 국민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정립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대중적 정론지’임을 자처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국내 신문 사상 최초로 탈네모꼴 글꼴인 ‘한겨레결체’를 새롭게 만들어 지면에 활용하고 있다. 탈네모꼴 글꼴은 한글의 조형미를 극대화하고, 가독성을 높인 새로운 글꼴로 독자와 시민들에게 한겨레결체를 무료로 배포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호를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로 변경했다. 2009년에는 프랑스의 국제 전문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업무 제휴를 맺고 한국판 발행 사업을 시작했으며, 웹 방송 ‘hani TV’를 개국하여 종합 미디어 언론 기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2014년 2월에는 미국의 자유주의 계열 인터넷 신문 <허핑턴 포스트>와 제휴하여 합작법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더불어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콘텐츠 혁신을 위해 혁신 3.0 비전을 세우고 브랜드 이미지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간지 <한겨레신문>을 비롯하여 온라인 사이트 하니(hani.c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사 주간지 <한겨레21>과 영화영상 주간지 <씨네21>, 월간 경제매거진 <이코노미 인사이트>를 함께 발행하고 있다. 이밖에 내부 연구 기관으로 경제 사회 데이터와 담론을 연구하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겨레말글연구소, 디지털 세대의 정보 및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 캠페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과디지털연구소가 등이 있다.

자회사로는 한겨레신문사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유통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겨레에스앤씨(주)와 한겨레 계열 잡지의 정기 독자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대행하는 한겨레미디어마케팅(주)이 있으며, 계열사로는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한겨레출판(주)과 평생교육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한겨레교육(주)이 있다.

3) 연합뉴스

1980년 12월 19일 언론통폐합의 일환으로 기존의 <합동통신>·<동양통신> 등 5개 통신사를 통폐합하여 <연합통신>을 설립했다. 1998년 12월 북한 취재 전문 통신사인 <내외통신>을 흡수하면서 이름을 <연합뉴스>로 바꾸었으며, 2003년 4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되었다.

<연합뉴스>의 주주는 뉴스통신진흥회, 주요 일간지 등 한국신문협회 가입사,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과 지방방송국 등 한국방송협회 가입사를 포함하여 총 40여개사이며, 대주주는 뉴스통신진흥회, KBS, MBC 등이다.

<연합뉴스>는 외국 뉴스의 국내보급, 국내 뉴스의 해외 서비스, 중앙 기사의 지방 공급, 지방 뉴스의 중앙공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외신의 경우 미국의 미국연합통신(AP)·국제합동통신(UPI), 영국의 로이터(Reuters), 프랑스의 프랑스트통신사(AFP), 소련의 타스(TASS), 중국의 신화통신사 등 세계 6대 통신사를 비롯한 전 세계 80여 개 뉴스통신사와 뉴스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전 세계 30여개 지역에 국내 언론사 중 최대 규모인 60여 명의 상주 해외특파원이나 통신원 등을 주재시켜 해외 취재망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국내 뉴스의 해외 서비스의 경우 2015년 8월 현재 세계 80여 개 외국통신사, 137개 재외한국공관, 주요 국제기구 등에 영어·중국어·일본어·아랍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으로 뉴스를 전송하고 있다. 이외에 <연합연감>·<북한연감> 및 <영문연감>을 발행하고 있고, 월간 <연합 이매진>·<재외동포의 창>·<밴티지 포인트 Vantage Point> 등 출판물을 출간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번지에 있다.

4)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Ohmynews)는 대한민국의 언론이자 인터넷 신문이다. 2000년 2월 22일 창간 초기에는 인터넷 언론으로 출발하였으나 2002년 4월 30일부터는 지면 신문을 함께 발행하였다. <타임>은 <오마이뉴스>를 대표적인 UCC 사이트의 하나로서 세계의 시민참여 저널리즘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블로거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허핑턴 포스트>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창간되었다. 2000년 2월 22일, 월간 <말>지의 기자였던 오연호가 <오마이뉴스>를 창간하였다. 2002년 4월 30일에는 주간 <오마이뉴스>를 창간하여 종이로도 뉴스를 내보냈으나, 현재는 종이판은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민중총궐

기 당시 특별판을 인쇄했던 사례가 있다.

<오마이뉴스>는 일반인 독자들인 쓴 기사들을 받는 일반인 시민 기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자(네티즌) 중에 누구나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시민 기자로 가입할 수 있고 기사를 올릴 수 있다. 즉 실제로 전문 기자가 아닌 일반인과 네티즌들이 임시 시민 기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누구나 기사를 올릴 수 있다. 기사를 모아 편집하는 것은 상근 직원들이 담당한다. <오마이뉴스>의 20~30% 정도는 55명 정도 되는 상근 직원이 쓰고, 나머지는 70%는 일반 네티즌들인 시민 기자들이 쓴다.

성향은 진보적이다. 같은 진보 성향을 지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를 묶어서 속칭 한경오 또는 진보 성향을 지닌 <프레시안>도 묶어 한경오프라고 불리는데, 이는 보수 성향의 언론을 묶어서 부르는 ‘조중동’에 대비되는 표현이다.

4) MBC

한국의 지상파 공영방송사. 영어 이름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의 약칭인 ‘MBC’라고 호칭한다. 문화방송은 수도권을 가시청 권역으로 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있는 계열사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권역을 확보하고 있다. 1961년 서울의 첫 민간 라디오 방송국으로 개국한 이후, 1969년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진행된 언론 통폐합 과정을 거쳐, 1981년부터 한국방송공사가 주식의 70%를 확보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전환되었다.

문화방송의 전신은 1959년 4월 15일에 개국된 부산문화방송국이다. 일본의 민간상업방송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강력한 전파가 남해안 일대에까지 미침으로써 방송을 통한 일본문화의 침투가 우려되던 1950년대 말, 부산의 실업가이던 김상용과 라디오 상회를 운영하던 정환옥이 공동으로 상업방송의 설립을 논의한 끝에 1958년 1월 체신부에 설립허가원을 제출해 역사적인 개국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상업방송이 발전할 만한 경제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상용과 정환옥은 당시 부산일보사와 조선건직주식회사 대표로 있던 김지태에게 방송국을 넘기고 본인들은 서울에 별도의 상업방송국을 세워 부산과 민간상업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1961년 1월 28일 설립허가를 얻어내어 개국 준비를 서둘렀으나 그 과정에서 소요자금이 모자라 그해 2월 역시 김지태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김지태가 운영권을 인수한 후 1961년 2월 21일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가 발족되었고, 같은 해 12월 2일 라디오 방송(호출부호 HLKV, 주파수 900kHz)을 개국하고 정규방송을 시작하여 서울에서도 최초의 민간상업방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1년여 뒤인 1962년 7월, 정부는 박정희의 육영정신을 기리는 목적으로 5·16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준비과정에서 김지태 소유의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사로 하여금 주식을 장학회에 모두 기부하게 함으로써 5·16 장학회가 운영권을 확보했다.

1963년 4월부터 1965년 2월 사이에 제1차 지방망확장사업으로 대구·광주·대전·전주에 지방국을 개설하여 서울·부산을 포함한 전국 6대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1968년부터 1971년 사이에는 제2차 방송망확장사업을 전개하여 13개사의 지역민간방송과 새롭게 제휴관계를 맺고 전국 네트워크를 가맹사 체제로 개편하여 전국의 중소도시까지를 연결하는 방송망을 완성했다. 1969년 8월 8일 텔레비전 방송을 개국했으며, 2년 뒤인 1971년 9월 19일부터는 에프엠(FM) 방송도 시작했다. 또한 1980년 12월 22일부터는 텔레비전 방송을 컬러로 방영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그러한 방송망 확장과 기술적 진전 외에 제도적인 면에서도 1974년 7월 24일 <경향신문>을 흡수하여 같은 해 11월 1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의 통합법인체를 발족했다.

1980년 12월 1일 신군부세력에 의한 강권적 언론통폐합조치는 한국의 언론 방송사의 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조치로 기존의 동양방송(TBC)과 동아방송(DBS)이 한국방송공사(KBS)에 흡수·통합되어 문화방송은 유일한 민간방송으로 남게 되었으며, 서울의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지방 가맹사들의 경영권을 인수·계열화하여 일원화된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1981년에는 주식의 70%를 국가에 헌납하고 정부는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이때부터 한국방송공사가 문화방송의 대주주가 되었고, 한국의 양대 지상파 방송이 공영방송체제로 일원화되는 구조를 형성했다.

1981년 4월 1일에는 새로 제정된 '언론기본법'의 '언론기업의 겸영금지' 조항(제12조)에 의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재단법인 <경향신문>으로 분리되었다. 1982년 여의도 스튜디오가 준공되고 이후 1986년까지 사옥의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서 정동에 있던 방송 송출 시설도 여의도 사옥으로 이전했다. 한편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갖고 있던 문화방송 주식 70%가 1988년 12월 31일 방송문화진흥회법(1988. 12. 16 제정)에 의해 발족된 방송문화진흥회로 이관되었다.

1994년에는 경기도 일산에 신사옥 부지를 확보하고, 2004년에 착공에 들어가 2007년 제작본부인 MBC드림센터를 완공했다. 한편 2013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신사옥인 방송미디어센터를 준공하고, 2014년 본사를 상암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2016년에는 개국할 때부터 사용했던 남산 송신소 시대를 마감하고, 관악산 송신소에서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원, 안양, 용인 등 경기도 일원에서도 직접 수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방송은 그 역사 만큼이나 장수 프로그램과 인기 프로그램이 많았다. <전설따라 삼천리>는 1965년에서 1983년까지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1977년에는 <대학가요제>를, 1979년에는 <강변가요제>를 개최, 대학생과 신인들을 위한 음악경연대회의 모델이 되었다. 2005년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무한도전>은 최고의 시청률과 팬덤 현상을 일으킨 예능 프로그램으로 십여 년 이상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1990년 시작한 <피디수첩>은 간판 시사 프로그램으로 심층 취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청률을 보였다. 1973년 시작한 <장학퀴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프로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1997년부터는 EBS에서 방영하고 있다.

드라마에 특히 강세를 보여 '드라마왕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수사반장>(1971~1989), <전원일기>(1980~2002), <사랑이 뭐길래>(1991~1992), <여명의 눈동자>(1991~1992), <사랑을 그대 품안에>(1994), <마지막 승부>(1994), <서울의 달>(1994), <보고 또 보고>(1998~1999), <내 이름은 김삼순>(2005), <베토벤 바이러스>(2008), <동이>(2010),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 <지붕뚫고 하이킥>(2009~2010), <더킹 투하츠>(2012) 등의 걸출한 역작들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방송된 <대장금>은 전 세계에 수출되면서 한류를 견인하기도 했다.

문화방송은 프로야구의 원년 멤버였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자 프로야구단 MBC청룡을 창단하여 1989년까지 운영했다. MBC청룡은 서울을 연고로 하여 서울시민들의 애정을 받았으며, 1983년 한국시리즈에 진출, 준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MBC청룡 구단은 1990년 1월 럭키금성그룹이 인수하여 LG트윈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문화방송의 꿈을 떠났다.

미래전략본부, 편성제작본부, 보도본부, 드라마본부, 예능본부, 방송인프라본부, 미디어사업본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직원은 문화방송이 약 1,710명, 지방계열사와 자회사 포함 약 3,900 명이다. 2017년 기준 자본금은 10억 원이며,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67에 본사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6에 일산드림 센터를 두고 있다.

2017년 현재 MBC 경남을 비롯해 16개 지역계열사와 MBC C&I, MBC 아카데미, MBC 아트, iMBC, MBC 플러스, MBC AMERICA, MBC PlayBe, MBC 나눔, MBC 서울경인지사 등 자회사가 있다.

5) YTN

개국 당시 <연합통신>이 지분을 30%로 최대 주주가 되어 1994년 출범한 뉴스전문 채널. 하지만 현재는 완전 분리되어 독립된 뉴스전문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1994년 2월 14일에 연합-YTN 양측은 경력사원 57명, 신입사원 36명, 타사 채용사원 6명 등 총 99명을 신규 채용해 연합 채용 인원 중 37명을 YTN에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자 99명 중 연합통신 업무에 전념할 사원은 41명, YTN에 배치되어 근무할 사원은 58명이었다.

‘한국의 CNN’을 표방한 YTN은 3년여 간의 준비 끝에 세계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위성뉴스 취재시스템(SNG)과 뉴스룸 전산 자동화시스템, 첨단 편집 및 송출장비를 모두 갖추었다. 또한 CNN 등 세계 유명방송사와도 뉴스공급계약을 체결해 완벽하게 전세계의 뉴스를 커버하는 방송 체계를 확립하였다.

YTN은 1995년 1월 5일에 시험방송을 거쳐 3월 1일, 케이블TV 본방송과 동시에 개국하였다. 개국 첫날 <YTN 24>를 신설해 3.1절 보신각 타종 현장을 생중계했고, 케이블TV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리포트 시리즈를 내보냈다.

개국 당시에는 뉴스전문채널의 위력도 없었고, 재정상황도 열악했다. 개국 초기에는 연합뉴스의 전신인 연합통신 소속이어서 YTN을 ‘연합TV 뉴스’라고 불렀다. 개국 초기 주요 프로그램은 스트레이트 뉴스 <YTN 24>를 비롯해 매 시간 30분마다 했던 헤드라인뉴스 프로 <뉴스메모>, 분야별 특화뉴스 프로 <YTN 스페셜>, 밤 9시마다 했던 심층분석 뉴스토크 프로 <채널24 집중조명>이 있었고, 산업기상정보, 레저일기예보, 세계기상정보 등 특화 일기예보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그러나 YTN은 경영 측면에선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려일으켰다. 결국 1996년 연합뉴스는 사원총회에서 YTN과 분리했으며 1997년 한전정보네트웍스로 230억 원에 매각했다. YTN은 1998년 12월 말부터 한전 330억원, 담배인삼공사 440억원, 한국마사회 200억 원 등 1100억 원을 2차 증자해 만성적자 상황에서 점차 벗어났고, 1999년 3월에 이르러선 흑자를 달성하였다.

2000년에는 체신공제조합으로부터 남산 서울타워를 인수하여 사업영역을 정보통신/관광/통신시설 임대업에까지 확장했고, 이듬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고 2002년 전 이동통신사에 뉴스서비스를 확대했다. 2003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해외 위성방송의 실시간 방송을 개시했다. 2005년에는 서울타워를 ‘N서울타워’로 재개장하면서 영업권을 CJ엔시티에 임대했고, 지상파 DMB 채널인 mYTN이 개국하여 DMB로도 방송되고 있고, 2006년에는 방송 10만 시간을 돌파했으며 야후! 코리아에서 생방송도 개시했다. 2007년 9월에는 과학채널 YTN 사이언스가, 2008년 4월 30일에는 YTN NEWS FM이 개국해 YTN 뉴스를 24시간 라디오로 들을 수 있다. 출력은 5kW로 허가되어 있으며, 송신소는 경기 안양시 삼성산에 설치했다가 2010년 3월에 성남시 청계산으로 이전했다. 2011년부터 HD 방송을 실시했다. YTN뉴스의 HD마크는 상당히 늦게 뗐는데 2013년 4월까지 HD 마크를 사용했다. 즉 2013년 4월까지 적지만 SD방송은 있었다.

2011년 7월에는 24시간 날씨전문채널인 YTN Weather가 개국되었다. 2017년 1월부터 장르 변

경과 함께 채널명이 YTN LIFE로 바뀌었다. 마포구 상암동 DMC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2014년 4월 7일에 이전하였다. 2015년에 iHQ 미디어부문(옛 YTN미디어)의 CUBE TV 개국 준비 과정이 진행되면서 두 회사 간의 관계가 다시 어느 정도 이어진 듯 보인다. CUBE TV의 사무실이 상암동 YTN 뉴스퀘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국 기자회견도 이곳에서 열렸다. 이후 iHQ에서 YTN WORLD와 프로그램 방영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AXN Korea의 사무실도 YTN 뉴스퀘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iHQ 미디어부문 온라인판 기사가 YTN을 통해 공급되기도 하고 K STAR의 기사가 YTN에 출연하는 등 교류는 이어지고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YTN의 모든 뉴스 프로그램 오프닝에 N서울타워와 상암동 YTN 신사옥 건물이 등장하며, 2015년 6월부터 YTN은 창사 2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6) MBN

MBN은 매일경제신문이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로, 뉴스·드라마·예능·교양 등을 방송한다. 1995년 3월 1일 개국한 MBN은 본래 종합 뉴스 방송으로 출범하여 국내 외 뉴스를 제공하고, 특히 증권 투자전략·부동산 전망·창업 정보 등 다양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다가 2011년 5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고, 그해 12월 종편으로 개국하였다.

개국한지 7년이 지난 2002년 5월 1일 미국의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사인 CNBC와 업무 협조 계약을 체결하여 MBN-CNBC로 채널명을 변경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 MBN CNBC에서 MBN으로 채널명을 다시 변경하였다. 2009년 12월 28일 MBN CNBC에서 4년만에 SBS CNBC로 변경되었다. 2005년 7월 4일 MBN 채널명 환원 MBN 새로운 CI 발표하였다.

2010년 12월, 매일경제방송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서 선정되어 2011년 12월 1일 매일방송은 종합편성채널로 다시 개국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19년 11월 분식회계 혐의 기소로 장대환 회장이 사임되자마자, CI 로고를 M자 포함한 숫자 1이 사라지고 대문자 알파벳 M을 아예 전면 교체되었다.

2021년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5월부터 방송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1년 2월 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7) EBS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 전문 방송국. 1951년 6월 18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매일 15분씩 방송한 '라디오 학교'를 효시로 한다.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설립된 후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이 공포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부터였다. 초창기에는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197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라디오 방송학교를 인수하면서, 이때부터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방송의 대원칙이 설정되었다.

1970년대 후반 국무총리 지시각서에 의해 교육방송은 한국교육개발원과 KBS 두 축을 중심으로 이원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KBS 제3TV(UHF)와 KBS 교육 라디오 채널이 신설되면서 방송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때 한국교육개발원 방송본부는 프로그램의 연구 기획 제작을 담당하고 KBS는 방송 송출을 전담했다. 이때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은 'TV 고교 교육방송'과 'TV 고교 가정학습' 등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방송본부는 1990년 KBS로부터 분리되어 교육전문 방송국 교육방송(EBS)으로 정

식 출범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프로그램만 제작했으나, 출범 후에는 일반 교양프로그램도 제작하게 되었다. 이어 1997년에는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거하여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방송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시행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개편되었고, 공영 교육방송국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EBS 인터넷 방송과 디지털 TV 방송국 등을 개국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인터넷을 활용한 EBS의 교육 방송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4년 EBS 수능 강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e-Learning 교육의 선두주자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초·중등, 유아·어린이 전문 채널도 개시하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 다큐멘터리를 제작·수출하여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교육 미디어 그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EBS 1TV, 2TV, FM라디오 등 지상파 3채널과 EBS 플러스1, 플러스2, EBSse, EBS U, EBS America 등 위성 5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으로는 진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수능을 담당하는 ebsi.co.kr과 외국어 전문 사이트 ebslang.co.kr, 영어 전문 사이트 ebse.co.kr, 수학 전문 사이트 ebsmath.co.kr 등 4개 사이트가 있다. 2016년 3월 기준 57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본사에는 5본부 3센터 1국 2실 3특임국 45부가 편성되어 있다.

8) SBS미디어넷

2000년대 초반부터 SBS는 계열 케이블 채널들을 운영하는 3개의 회사(SBS 스포츠채널, SBS 골프채널, SBS 축구채널)를 ‘SBS미디어넷’이라는 브랜드로 묶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0년 넘게 계열 채널들을 각각의 회사별로 운영하는 체계를 유지하다가 2014년 SBS funE와 SBS CNBC의 법인이 SBS Plus의 법인에 합병되었으며, 2017년 SBS Sports와 SBS Golf의 법인도 SBS Plus의 법인에 합병되었다.

2019년 6월 SBS Plus와 SBS funE를 ‘SBS플러스미디어’라는 자회사로 물적분할하였으며, 이후 기존의 SBS플러스 법인은 ‘SBS미디어넷’으로, 분할된 SBS플러스미디어 법인은 ‘SBS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물적 분할 이후의 SBS플러스 소속 채널 2곳은 방송이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SBS미디어넷 채널들과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

SBS MTV와 니켈로디언의 경우 SBS미디어홀딩스와 미국 바이어컴의 합작 회사인 ‘SBS바이아컴’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SBS플러스 소속 채널들과 달리 외부적으로 SBS미디어넷 채널로 함께 소개되고 있다. 2019년 10월, SBS미디어넷에서 신규 라이프스타일 채널인 SBS FiL을 개국했다.

2. 세종시와 협약 맺은 대전지역 언론사

1) TJB(대전방송)

대전방송(大田放送·Taejon Broadcasting CO.,LTD, TJB)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SBS(모기업:태영건설)의 민영 네트워크 방송국이다. 우성사료를 대주주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영 방송사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하고 있다. 1994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7일에 시험방송을 시작한 이후 1995년 5월 14일에 개국하였다. 대전, 세종, 충남 일원 및 충북 일부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천안, 홍성에서 방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호출부호는 HLDF-DTV, HLDF-FM, HLDF-TDMB를 사용한다.

1995년 8월 10일 공주TV중계소의 시험전파 발사를 시작으로 방송권역 내의 난시청지역에 중계소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6년 4월 3일에는 일본의 (주)TV미야자키(テレビ宮崎) 방송사와 상호우호조약을 체결했다. 1997년 7월 1일, FM방송 개국을 위한 준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FM라디오 방송의 개국 준비에 돌입했다. 1998년 2월 19일 서울방송과 라디오방송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마침내 3월 2일 파워FM이라는 이름으로 FM방송국을 개국하였다. 같은해 10월 1일부터 FM라디오의 24시간 방송이 시행되었다. 1999년 12월 21일 중국 허베이전시대(河北电视台)와 상호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2002년 1월 1일에는 지역 최초로 디지털TV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그 후 1년 11개월 후인 2003년 12월 1일에 디지털TV방송을 개국하였다. 개국 13주년인 2008년 5월 14일에 도룡동 신사옥 TJB 크리스탈타워를 착공하였고, 같은해 6월 30일에는 지상파DMB를 개국하였다. 개국 15주년인 2010년 5월 14일 HD방송을 시작하였다. 2012년 8월 21일 도룡동 신사옥 'TJB 크리스탈 타워'가 완공되었고, 9월 21일부터 TJB 크리스탈타워로 완전 이전하였다. 10월 11일에 정식으로 완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12년 10월 16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정책에 따라 지난 17년동안 방송해왔던 아날로그TV방송의 송출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디지털TV방송 시대를 열었으며 2013년 10월 16일에는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채널의 재배치를 실시하였다. 2017년 12월 29일에 TJB UHD 방송을 개국하였다.

2)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는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에 위치한 지역 종합일간신문으로 조간이다. 1990년 6월 11일 <대전매일>로 창간하였고, 2005년 1월 <충청투데이>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현재 본사는 대전·충남본사와 충북본사 이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충남본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30번길 67에, 충북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에 있다.

1991년 석간에서 조간으로 전환하였으며 주당 발행면수는 128면이다. 대전광역시에서 발행부수의 51%, 지방에서 49%가 판매되며 지사, 총국, 지국 합계 총 68곳의 국내보급망을 두고 있다. 1996년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30번길 67로 이전했으며, 2005년 1월 충청투데이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VI. 제언과 결론

1. 제언

2. 세종시 미디어단지 조성 방안

1. 제언

1) 용어(개념) 정립

(1) ‘언론수도’ 브랜드 네이밍의 적절성⁴⁹⁾

문화연구자 커튼(Curtin)은 경제학자나 지리학자들이 선호하는 클러스터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확장된 ‘미디어 수도(media capital)’ 개념을 통해 특정한 도시나 지역이 어떻게 일정한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의 논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미디어 수도 개념이 미국의 미디어산업뿐만 아니라 비서구권이나 개발도상국가의 미디어산업의 공간적 확장(지역적이든 혹은 지구적이든) 역시 동등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커튼은 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특정한 미디어 지구화(地球化 globalization) 과정을 미디어 수도의 등장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혹은 서울)의 한류(K-Pop)의 성장 및 해외진출 역시 일종의 미디어 클러스터/미디어수도의 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와 대중음악 상품을 생산, 유통시켜 온 한국(그리고 문화생산의 중심지인 서울)을 미디어수도로 상징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⁵⁰⁾

본 사업의 경우,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의미 확장성 없이 특정 업종이나 직역(職域)을 대상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생경하기 때문에 소구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언론수도’ 브랜드 대신에 ‘대한민국의 보도중심’으로 슬로건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수도(首都) 브랜드 *시·도 편제順

브랜드	자치단체	지역특성
해양수도	부산	해양도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교육수도	대구	행복교육 발상지이자 인문교육 선도
경제수도	인천	수도권,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문화수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광주비엔날레
과학수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행정수도/정치·행정수도	세종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예정)
환경수도	경남 창원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 도시

(2) ‘언론’과 ‘미디어’

세종시는 공식적으로 ‘언론(미디어)단지’ 또는 ‘미디어단지’를 병기(併記)하거나 혼용하고 있으며(세종시 보도자료 2021. 9. 30.), 일부 언론 또한 ‘언론(미디어)단지’(충청타임즈 2021. 9. 30.)로 쓰거나⁵¹⁾ 어휘의 순서를 바꿔서 ‘미디어(언론)단지’(경향신문 2021. 10. 4.)로 표기하는 경우가

49) 충청투데이 2021.11.29. 세종시 행정·입법·사법부 망라해야 실질적 행정수도

중앙일보 2018.9.28. [부울경 새로운 도전] 부산, 한국 최고의 해양도시 넘어 동북아 해양수도로 뜬다

영남일보 2017.10.19. [기고] 교육수도 대구의 허상과 이상

인천일보 2013.11.20. 중소기업이 웃어야 경제수도 인천이 활짝 핀다

광주일보 2021.7.19. 광주시, 문화수도 명성찾기 사업 속도 낸다

뉴스핌 2020.12.31. [신년사] 허태정 대전시장 "과학수도 대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울산시 블로그 2012.1.30. [울산여행] 한국의 산업수도! 울산산업단지로 떠나 볼까요?

경남신문 2021.11.2. "환경수도 창원,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을"

50) 문상현(2013). 미디어산업의 지구화에 대한 통합적 분석틀의 모색: K-Pop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견이 된다. 이는 사업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언론(press)은 언론사나 보도기관이 취재·보도 및 편집·제작 활동을 통하여 뉴스를 생산·배포·유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실·공정보도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미디어(media)는 ‘매체’를 나타내는데 이는 메시지를 담아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용기(message-vehicle), 예를 들어 신문·잡지·서적·라디오·TV를 말하거나 용기의 운반체(vehicle-carrier)인 음파·전파·광파 또는 메시지의 유통통로(channel)나 네트워크(network)를 말한다. 미디어는 기술의 진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신문·잡지·서적·라디오·TV 등의 ‘올드 미디어’(old media)와 그와 아닌 ‘뉴미디어(new media)로 구분된다.⁵²⁾⁵³⁾ 따라서 세종시가 사용하는 ‘신문·방송 미디어단지’는 명칭이 장황할뿐더러 각개 용어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미디어단지 조성 방안의 취지는, 주로 서울에 본사를 둔 중앙언론사를 유치하고 집적(集積)함으로써 관내에서 언론기관의 저널리즘 활동을 지원·조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미디어산업(M&E)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의의 ‘미디어단지’ 대신에 협의의 ‘언론단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민간시설과의 혼란 예방

현재 세종시 관내에는 행정도시 건설 초기에 정부로부터 언론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의 청암프레스센터(세종미디어플라자)와 태한프레스센터가 건물을 신축·입주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⁵⁴⁾⁵⁵⁾ 따라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본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이들 민간 시설과의 혼돈이 불가피해진다. 일부 언론이 세종시의 최근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공용 프레스센터’(금강일보 2013. 3. 19.)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⁵⁶⁾ 따라서 향후 세종시가 추진하는 시설과 이들 기존시설과의 용어 사용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지원 자치법규 제정

서울시는 상암DMC 조성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사업 착수에 앞서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였다.⁵⁷⁾ 2002년 1월 5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는

51) 충청타임즈 2021.09.30. 세종시 언론수도 되나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75060>

52) 문화관광부(2007). 2006 문화미디어산업백서

53) 매일경제 2021.11.03.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과 언론 정책 분리해야": 미디어혁신부 신설해/OTT·제작사 진흥 발판 /언론은 합리제 기구 설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43674/>

54) 세종미디어프라자 <http://const.cheongahm.co.kr/flow/>

태한프레스센터 http://contents.welcometo.co.kr/Viewer/shop_Viewer.aspx?pSHCD=3600329

55) ○ 세종의소리 2017. 1. 9. 행복도시 언론부지, 언제 공급하나요: 지난 2012년 12월 1차 공급에서는 한국일보와 콘소시엄을 구성한 디트뉴스24(현 세종포스트 입주)부지가 평당 693만원, 금강일보가 628만원에 공급받았다. 금강일보는 2015년 4월, 세종포스트 건물은 2016년 5월에 준공하고 입주했다. 한편, 세종포스트 건물에는 6층-12층까지 한시적으로 인사혁신처가 입주해있다. 금강일보 빌딩은 금강일보 외에 언론사 공간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26>

○ 금강일보 2013. 3. 19. "세종시에 공용 프레스센터 건립해야": 금강일보는 지난 1월 세종시 언론단지(1-5생활권 내 5개 필지, 총 1만 2542㎡) 조성 참여사로 선정돼 (주)태한종합건설과 함께 C39-1 1591㎡ 부지에 1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5260㎡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14>

○ 세종포스트 2012.12.24 세종포스트, 행정도시에 프레스센터 짓는다: 행정도시 프레스센터 사업자로 세종포스트와 한국일보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5생활권 C39-3 3,000㎡ 면적의 언론단지에 대한 제안입찰에서 청암(주)-세종포스트-디트뉴스-한국일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세종포스트 컨소시엄은 내년 하반기 중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 2,930㎡(약 6,900평) 규모의 '세종미디어프라자'를 착공할 계획이다. 2014년 하반기 준공 예정.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6>

56) 금강일보 2013. 3. 19. "세종시에 공용 프레스센터 건립해야"

DMC의 기반조성과 입주자의 유치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DMC의 활성화와 첨단 정보미디어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또 DMC는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정보미디어산업의 집적지를 지향하며, 서울특별시의 정보화, 세계화 및 환경 친화적 발전을 선도해 나갈 최첨단 정보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센터를 지향한다(제5조 조성목표).

또 기존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회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 5월 10일 '프레스센터 관리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프레스센터의 임대 및 대관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물의 설립 취지를 기준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제1조 목적).⁵⁸⁾ 따라서 향후 세종시 역시 치밀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본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충청권 시·도 협력 모색

앞서 실패 사례로 언급한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밸리의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들은 20여군데에 이르렀다. '현재 조성 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58만평 규모의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조성,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광주시), '고속전철역이 들어서는 천안역사께서 5분 거리인 아산 일대에 대단위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충청남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구미시에 50만평 규모의 대단위 멀티미디어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경상북도), '송도 지역에 600만평을 매립 중에 있는데 이중 106만평을 미디어밸리 단지로 조성하겠다'(인천시) 등등”이다.⁵⁹⁾ 이는 자기 지역의 이익 앞에는 친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행정도시와 정부세종청사가 관내에 입지해 있다는 지리적 연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인접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간에 사전에 상호 양해에 합의하고 공동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4개 시·도가 최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도⁶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세종시의 수도권 대체효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충청권 내의 인구 유입이 심화되고 행정·경제·기업·의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세종시에 집중되는 등 세종시로의 빨대현상으로 인해 충청권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충청권 내부의 지적⁶¹⁾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 추진

본 연구는 국책사업을 제안하고 성사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

57)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시행 2019. 3. 28.][서울특별시조례 제7046호, 2019. 3.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1. "디지털미디어시티"란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조성되는 첨단 정보미디어 단지를 말한다. 2. "정보미디어산업"이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중요한 사업부문으로서 방송·게임·영화(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음반·디지털 교육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7. "미디어스트리트"란 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 조성되는 가로(가로)중 일부를 첨단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의 실험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단지안의 혁신이 일상적으로 창출되도록 조성된 가로를 말한다.

58)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관리운영지침(제정 2010. 5. 10, 개정 2016. 5. 16, 개정 2020. 12. 31)

59) 신문과방송 320호 1997. 8. 지역특성 맞는 소규모 단지 조성 바람직: 미디어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60) 세종시 보도자료(2021. 11. 2.) 국가균형발전 완성의 시작, 충청권 메가시티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053022Ra0zV7m>

61)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세종시 집중화 현상 대응 관련 법률 개정방안

환이다. 하지만 발주처나 연구 수행자의 지위와 역량 면에서 볼 때 지역 차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전 스튜디오큐브 건립 사업의 경우,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을 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마침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 역시 행정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설득력을 제고해야 한다.

2. 세종시 미디어단지 조성 방안

1) 프레스센터 건립안 - 세종프레스센터 또는 한국프레스센터 세종분원

(1) 공공청사 프레스센터 운영 사례



2019년 12월 신축·개관한 국회 소통관 전경과 위치도. 개관 1년 뒤 기획재정부 주관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다. <출처>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2020. 12. 16.⁶²⁾, 서울신문 2015. 3. 17.⁶³⁾

공공청사의 프레스센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청와대 춘추관(春秋館)과 국회 소통관(疏通館), 외신지원센터(문화관광부) 등이다. 춘추관은 청와대 경내 프레스센터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00㎡ 규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소관의 외신지원센터는 2013년 한국프레스센터 내에 개소했으며 상주 및 방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시설이다.

최근에 돋보이는 곳은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사업’을 시행하여 2019년 12월 개관한 국회 소통관이다. 국회는 출입 기자나 언론사 수가 가장 많고 그 취재 역사도 어느 곳보다 오래된 기관이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외신 69곳을 포함해 480개 언론사에서 기자 1,500여명이 출입하고 있다.⁶⁴⁾ 소통관은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4,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프레스센터는 언론사 및 출입기자 수 증가로 인해 야기되었던 기존 국회 본관 정론관(正論館)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⁶⁵⁾ 소통관 사업비는 국회 예산 646억원(당초 510억원)이 투입됐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사업은 공공청사로서 규

62) https://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50413

63) 서울신문 2015. 3. 17. [단독]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건립 논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17002007>

64) 경향신문 2020. 12. 11. 홍익표식 ‘소통관’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012112045045/>

65)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2019. 12. 23. 「국회소통관」 준공, 민주주의 논하는 소통의 새 중심
https://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47978

모 및 비용 산정 시 청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⁶⁶⁾

(2)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회관)

한국프레스센터 운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이고 뉴스 미디어의 혁신을 지원하며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약칭 신문법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스스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⁶⁷⁾⁶⁸⁾ 한국 언론사 초기인 신문연구소(1964년)는 민간 언론사 경영주의 출연금으로 설립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한국신문회관(1962년, 現 언론진흥재단의 전신)은 정부 지원금으로 지었고, 현재의 한국프레스센터(1985년)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조성한 언론공익자금으로 지어졌다. 프레스센터 건립 후 언론회관은 코바코로부터 건물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한국신문회관 자리에 건립됐다. 내·외신 기자들의 기사 송고를 위한 첨단 송수신 통신망이 갖추어져 있어 국내외 뉴스의 산실 역할을 하며,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한 교통으로 인하여 각종 행사가 열린다. 코바코는 서울신문사와 함께 프레스센터의 소유주인데, 건물 12층부터 20층까지를 언론재단이 무상으로 관리·운영해왔다. 코바코와 재단은 2016년부터 프레스 운영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끝에 2020년 말 재단은 부당이익금을 완납하고 코바코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⁶⁹⁾ 재단이 프레스센터를 계속 운영하되 임대료를 물게 된 것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 및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한다. 2012년 현재 지역신문팀(現 지역언론팀)을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11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의거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재단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과 함께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관리하게 됐다.⁷⁰⁾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직도⁷¹⁾



66) 한국개발연구원(2014).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사업

67) 한국언론진흥재단 브로슈어(2019)

6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9) 미디어오늘 2020.12.31 '프레스센터 운영 갈등' 언론재단-코바코 드디어 합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0>

70)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사(2012); 정진석(2011). 현대사 속의 언론: 한국신문회관(한국프레스센터) 반세기

71) <https://www.kpf.or.kr/front/employee/organizationInfo.do>

전술한 바, 국회는 국내 언론의 최고(最古)이자 최대의 출입처인 기관이다. 그러한 국회가 세종시에 분원(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한 만큼 세종시에 프레스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도 자연스럽게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언론진흥재단의 세종 이전(1안)을, 두 번째 방안으로 제2의 한국프레스센터(세종프레스센터) 또는 한국프레스센터 세종분원 설치를 추진하도록 세종시가 설득하는 방안은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물론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사자인 언론진흥재단의 동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세종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프레스센터 건립안은 본 사업인 언론단지 조성의 랜드마크로서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의 조직 중 최소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역언론팀)와 신문유통원(신문유통팀)의 세종 이전은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미디어스트리트 조성안 - 세종언론거리(SMS)

서울(수도권)의 역사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부 역할을 해온 서울, 그리고 인천·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은 오랜 시간동안 한반도 역사의 중심적 무대였으며 지금까지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인프라가 집적해 있는 한국 문화의 핵심지로서 한국인에게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부여해 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수도권)은 하나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재현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 세계도시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재현되어왔다.⁷²⁾ 이 같은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서울 DMC의 선도사업으로 단지의 중심가로(街路)인 DMS(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를 조성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⁷³⁾

세종시 역시 언론단지 조성을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전시효과를 꾀함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도구로써 세종 언론거리(言論街, 言論路), 즉 SMS(Sejong Media Street)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세종프레스센터 또는 한국프레스센터 세종분원 건립안과 연계하여 프레스센터 건물을 랜드마크로 설정하거나, 언론단지 내에서도 언론사와 미디어 제작시설이 집적된 중심가로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언론거리는 다채로운 국제 규모의 이벤트와 풍성한 상호 교감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⁷⁴⁾

3) 미디어단지 또는 M&E클러스터 조성안 - 세종미디어시티(SMC)

(1) 미디어산업과 미디어 클러스터의 의미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문화향유와 사회환경 감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산업은 국내 문화산업 시

72) 김수철(2014). 이동성, 장소, 문화: 미디어공간으로서 서울의 정체성

73) DMS 계획은 중심지구의 중심가로를 지구테마인 디지털미디어 산업에 입각해 IT산업의 표출을 위한 가로로 구성하여 지구산업이 도시경관으로 일체화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이 가로에 접하는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이 일반인에게 홍보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이 거리를 통하여 디지털 산업의 홍보와 전시효과를 꾀함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강한 도구로 이용된다.(손지수, 2006. 都市設計 比較分析에 의한 新都市 中心商業地域의 都市正體性 研究); DMC의 중심가라인 DMS는 첨단기술과 가로활동, 물리적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도시 장소로서 DMC를 첨단 디지털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실험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DMC 선도사업이다. DMS는 국내 최초의 계획된 디지털 첨단 가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김도년 등, 2011. 도시장소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첨단문화장소 조성 계획: 상암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 계획을 중심으로)

74) 미디어 스트리트(media street)는 옥외광고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박현, 2020; 김민정 등(2021). 비수도권지역의 미디어스트리트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재인용)

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콘텐츠 산업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⁷⁵⁾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의 연관기업과 기관들이 주로 대도시 같은 지역에 지리적으로 집적화 되어 일종의 군집(群集 agglomeration)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클러스터의 구성요소에는 완제품 생산업체와 서비스업체, 원재료 등의 공급업체, 금융기관, 연관 산업에 속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정의로써 클러스터는 특정한 지역에서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협조하거나 경쟁하는 상호 연관된 기업들과 관련 기관들의 집합을 말한다. 즉,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에 의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핵심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기능적 연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리적 집적’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산업 클러스터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이중 미디어 클러스터는 비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라는 생산물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여타 산업의 클러스터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즉 미디어 클러스터는 원료나 교통수단, 혹은 완제품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하청기업들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제조업 등의 클러스터들과 달리, 주로 전문화된 서비스나 노동인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창의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장소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문상현, 2013).

(2) 본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과거 입장

■ 세종 언론단지와 프레스센터의 꿈⁷⁶⁾

당초 정부세종청사를 건설하면서 언론단지를 조성할 원대한 계획까지 세웠다. 세종시를 건설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방송사, 신문사 등 주요 언론기능을 유치하여 도시 초기 활성화와 주민 편익(방송언론 관련 서비스 제공) 제고를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의 설명회까지 열었다. 지난해 (2012년) 1월 27일과 2월 7일 언론기관 초청 행복도시 설명회를 열었고, 2월 8일에는 언론기관 초청 행복도시 건설현장 투어까지 했다. 또한 언론기관 대상 행복도시 입주희망 수요조사를 2월 내내 했고, 4월 12일에는 언론단지 입주방안을 했다. 이후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언론단지 입주희망 언론기관의 수요를 재조사하고, 6월 18일에는 언론단지 조성 추진 계획(안) 추진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수요조사 결과 입주를 희망한 언론기관은 총 21군데였고 총 희망토지면적은 40,349㎡였다. 언론단지 계획은 1-5생활권(12,542㎡)을 나눠 총 5개 필지로 구획했고[1,500㎡(3필지), 3,000㎡(1필지), 5,000㎡(1필지)] 언론기관의 희망토지면적은 330㎡~6,600㎡이나 도시계획적 측면,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1,500㎡~5,000㎡으로 구획했었다. 그러나 12월의 입찰결과는 2군데 언론사에 그치는 등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다.

언론단지와 별도로 서울의 프레스센터 같은 건물을 지어 언론사들이 분양받거나 임대받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하지만 건설 주체가 마땅히 나서질 않았다. 공공기관이 세종 프레스센터를 지어 분양하는 방안, 서울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어 임대 분양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몇 차례의 수요조사 과정에서 희망하는 언론사가 드물어 유야무야되었다.

결국은 세종청사의 부처별 기자실이 언론의 취재중심이 되었지만 이곳에 취재기자가 상주하는 문제 역시 세종시 거주 여건에 대한 언론인들의 선호도, 각 언론사의 의지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75) 문화관광부(2007). 2006 문화미디어산업백서

76) 임충연(2013). 정부세종청사 시대 언론과 정부관계 새로운 도전과 실험. 저자-국무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

■ 언론재단 세종 프레스센터 운영 바람직⁷⁷⁾

정부세종청사와 관련, 언론계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현재 세종시에는 부처별로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기업이나 민간인 등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자들이 언론관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없다.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정부청사의 일정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할 수 있다. 하나 세종시에는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 기업인, 사회운동가, 이익집단 등이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발표하는 게 어렵다. 향후 세종청사에 각계각층이 모여들고 언론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도 할 것이다. 서울이나 과천으로 모여들던 시위대도 세종청사로 집결할 것이다. 벌써부터 세종청사 주변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언론과 만날 공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언론재단이 세종시에서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계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 언론재단이 세종시에서 분원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여 취재편의를 돕고 언론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바란다.

■ 세종시 취재보도시스템 개선방안⁷⁸⁾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프레스센터 건설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프레스센터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제2의 프레스센터, 세종 프레스센터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된다면 세종청사와 함께 시너지를 낼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청사 입주 정부부처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테마라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 언론환경 급변…지방신문의 ‘명과 암’⁷⁹⁾

대전청사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건 지방신문이다. 외청이기는 하지만 중앙부처를 출입하는 언론사로 위상이 높아졌다. 반면 지방지의 한계를 드러낸 계기도 됐다. 전국적인 사안을 지면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자리매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종청사는 대전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종합일간지에 파견 기자들이 등장했다. 본사 기자와 주재기자로 분리됐던 기자 체제가 다양화된 것이다. 현재는 각 신문사마다 출입기자들이 세종시로 내려오거나 출퇴근하는 형식이다. 세종청사에 기사를 배치한 신문사는 공동 숙소를 제공하고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전 부처가 내려오게 되면 별도의 취재본부를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세종시에 별도의 건물 신축 등으로 논의가 확대됐지만 최근 사그라지는 등 관심이 오히려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 세종시 시대 언론의 취재환경 변화⁸⁰⁾

대개의 언론사 입장에서 서울 상암동 DMC지역에 구입한 토지에 별도 청사를 짓는 일도 잘 진행되지 않고, 일부는 종편(종합편성채널) 등의 추가부담 속에서 세종시에 토지를 매입해 지사를 건설하고 많은 기자들을 파견하는 일은 부담스럽다. 이래저래 상황을 저울질하면서 이렇다 할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관망의 자세로 최소한, 부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려 한다.

77) 김재근(2013). 정부세종청사 시대 변화의 기로에 선 충청 언론. 저자-대전일보 세종취재본부장.

78) 김동호(2013). 세종청사 취재환경과 효율적 언론보도. 저자-중앙일보 세종취재부장.

79) 박승기(2013).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저자-서울신문 정책뉴스부 차장.

80) 이석우(2012). 세종시 시대 언론의 취재환경 변화. 저자-서울신문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 세종시 언론사 입주 3가지 방안 제시(언론보도)⁸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12년 2월) 8일 건설청 대강당에서 47개 언론기관을 초청해 ‘세종시 언론기관 입주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건설청 조수창 도시기획과장은 “각 언론사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끝에 3가지 안을 구상했다”라며 “가능하면 세종시에 입주하는 언론기관(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중앙 언론사 기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다음은 건설청이 밝힌 3가지 언론기관 입주방안 세부 내용.

◇언론단지 조성: 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단지 내 1-5생활권 2곳, 2-4생활권 1곳 등에 언론기관 단지 조성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청에 따르면 언론기관 단지 조성안 규모는 약 3~5만㎡이며, 토지공급방식은 경쟁입찰 또는 사업제안 공모(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자체 자금 또는 부동산 리츠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창 과장은 “언론기관 단지 조성시 부지 자체를 저가 매입함에 따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지만 언론기관이 정부 청사에 들어갈 경우 고층 높이 제한으로 인해 높은 건물을 짓거나 연면적을 필요로 하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프레스센터 건립(소규모 언론기관 유리): 프레스센터 건립은 한국진흥재단이 투자해 언론기관이 입주할 건물을 짓는 것. 현재 재단이 투자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건설청은 검토 중에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재단이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언론사들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투자자 모색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기관들의 일정한 입주 수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수창 과장은 “공공부문에 있어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하고, 민간부문 경우 민간투자자 또는 부동산 리츠 등을 활용 해야한다”라며 “현재 수요 조사 결과 임대수요가 전혀 없어 재단이 투자비를 충당치 않으면 언론기관이 직접 투자자를 섭외한 비율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개별입주 방안: 개별입주는 입주기관 특성에 맞춰 개발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게 건설청 설명. 조수창 과장은 “수요 조사는 2월말까지 충분히 진행할 예정이지만 1~2개 정도로 단지화는 무의미 하다”라며 “현재 재단 사업계획안 초안을 받은 상태라 검토 중이지만 지난해 경우 5개 언론기관이 신청했는데 재단에서 이 수요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상의해 1~2 방안이 안되면 개별입주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 본 사업에 대한 국회법 개정(세종의사당) 이후 상황

가. 정부와 세종시

■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⁸²⁾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分院(分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국정과제 77번 세종시 및 제주특도 분권모형의 완성: 국회分院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교통·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건립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 추진: 행복청, 2022년초

81) 일간투데이 2012. 2. 9. 세종시 언론사 입주방안에 기자들 '이목 집중': 건설청, 언론사 현장설명회...총 3가지 방안 제시, 조속한 입주 강조(전술한 미디어오늘 2012. 2. 1. 언론사 세종시 입주 “어디 좋은 땅 없다” 기사와 같은 맥락임).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37>

8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21. 12. 8.

<보기>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국회분원의 입지로 5개 후보지 중 B부지(50만㎡)를 최적으로 제시하였고 국회사무처도 이를 그대로 인용 발표하였다<사진上左>. 이에 비하여 행정도시건설청은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명시하지 않은 채(S-1생활권) 검토 후보지로 소개하였고<사진上右>, 세종시는 B부지 및 D부지의 일부를 합친 면적(61.6만㎡)을 현장 사진과 함께 후보지(예정지)로 소개하였다<사진下>.

<출처> 국토연구원(2019).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2019. 8. 13.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국회사무처,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 세종시 소식지 제110호(2021.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21. 9. 28.; 소식지 제175호(2021. 10.).

■ 행복청,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적극 지원⁸³⁾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9월 28일(화) 밝혔다.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건립절차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경 개원하여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3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간선급행버스(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주변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특화도시 조성에도 적극 연계·협력할 계획이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인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⁸⁴⁾

행복청은 국회법 개정으로 도시에 새로운 기능 추가와 도시건설 3단계에 진입한 행복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1월 15일(월) 밝혔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반영하여 토지이

8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21. 9. 28.; 소식지 제175호(2021. 10.)

8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21. 11. 15.; 소식지 제176호(2021. 11.)

용, 인구, 주택, 교통 등 각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세부계획이다.

행복청은 계획변경을 통해 도시건설 1단계와 2단계에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하고, 국회세종지사당 건립에 따라 추가된 도시기능, 예정지역 해제, 특별관리구역 지정, 주택 1.3만호 추가공급 등 변화된 여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건설 3단계에 필요한 개발 방향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건립이 확정된 국회세종지사당이 도시 중앙에 위치한 세종리(S-1생활권)에 입지하게 될 경우 기존 환상형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요 도시기능 재검토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한 계획 중 교통계획 등 기술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은 용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면서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추진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법적 절차인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확정된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지난 15년간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복도시 완성단계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국회세종지사당 등 국가의 주요 기능 확대가 도시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 건설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본격 추진 및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지원기능 확충⁸⁵⁾

○ 행정효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지사당 건립은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후속절차에 신속 착수 - 사업기본계획 마련, 예정지 개발·실시계획 정비(국회세종지사당 입지 예정지인 S-1생활권 마스터플랜 수립: 2021. 4. ~ 2022. 상반기), 총사업비 협의, 사업주체에 따른 행특회계(설계비 147억원) 집행방안 마련 등 추진

○ 국회세종지사당 이전에 대비하여 직원 숙소, 편의시설 등 업무 지원단지 조성계획 수립 추진

○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이전 등 도시 발전단계를 고려한 미디어타운,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기반 구축전략 마련

■ 국회 세종지사당에 대해 묻고 답하다⁸⁶⁾

○ 국회 이전 규모와 이전 효과는: 정확한 이전 규모는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인데요. 사무처에서는 정부세종청사 부처 관련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이전을 최적으로 제시했어요.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텐데요. 국토연구원은 1조원에 가까운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예상했습니다. 국회 인력, 기관·단체 등 직접 이주 인원만 5,200여명에, 방문객도 하루 수천 명에 이를 테니 실제 효과는 몇 배에 달하겠죠?

○ 세종지사당과 주변 인프라는: 서울 국회의 무려 1.8배 규모인 62만㎡ 부지에 국회 세종지사당이 들어서고, 인근에는 국회 및 유관기관 인력을 위한 주거·업무·휴식 공간인 국회타운은 물론이고 미디어단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8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1. 2.)

86) 세종시 소식지 제110호(2021. 10.). 시정특집: 국회 세종시대 개막.

○ 세종행을 희망하는 언론사는: MBC, YTN, 한겨레, 연합뉴스, MBN, EBS, 경향신문, SBS미디어넷 등 우수 언론사들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수도권에 집중된 언론사들이 세종에 터를 잡으면 보도 방향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균형적 시각으로 바뀌겠지요.

○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우선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세종의사당 건축비와 철도, 도로, 교량 등 구축에 필요한 행복도시특별회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계 공모, 기본·실시 설계, 착공 등을 거쳐야 하니 2028년경 세종의사당을 만나보게 될 듯합니다.

■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시작하는 행정·정책·문화·미디어도시⁸⁷⁾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다양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 세종시의 완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행정기능만으로는 도시의 자족성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정책 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세종시는 행정·정책·문화·미디어도시의 정체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행정과 문화 도시는 행정기능의 이전, 문화시설의 건립으로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책과 미디어 도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곧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가 정해지고 국회타운 조성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가 100년 대계임을 감안하여 전체가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간을 설계하고, 국회타운은 언론기관과 NGO 등의 동시 이전을 감안하는 검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언론 보도

국회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정치1번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의 관심도 세종으로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세종이 뉴스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이에 따른 언론사의 취재망 재정비가 불가피하다.⁸⁸⁾

2021년 3월 23일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겨레신문 김현대 사장은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많은 기자가 세종에 거주하면서 일해야 하는, 취재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며 “세종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닥쳐올 변화에 깊이 관심을 갖다가 기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구성원들과 어느 선까지 세종에 갈지 논의해야 하는데, 본사 이전까지도 고려할 만큼 최대한 열어놓고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후보지 인근에 미디어단지를 구축하려는 세종시는 언론사와 협약을 맺으며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미디어단지를 꾸릴 때 언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고, 행정적인 지원과 시에 맞는 미디어 기능을 발굴하는 차원”이라며 “여러 언론사가 문의해오고 있어 협약 체결사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협약을 체결한 언론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업무협약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데다 실제 해당 부지를 분양하는 주체는 세종시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세종시엔 토지 용도변경 권한만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사옥 건립으로 복합부동산 사업 등을 통한 수익 창출까지 기대했던 언론사들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고 있다.⁸⁹⁾

87) 세종시 소식지 제110호(2021. 10.). 인용문의 저자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019년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본원 설치 및 운영방안)을 수행한 연구 책임자이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언론단지나 미디어단지 조성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88) 뉴스헤드라인TV신문 2021.09.30 국회 세종시대 눈앞...세종, 언론수도 되나
<http://www.newsheadlin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024>

89) 한국기자협회보 2021.04.06. 상암 이어 세종? 언론사 잇따라 러브콜; MBC·YTN·한겨레·연합뉴스 등/주요 언론사들'

하지만 방송사들의 세종센터 건립 추진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 진행에 따라 변수가 많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국회가 이전할 경우 세종시에 언론사 입주 수요가 늘 것이므로 미디어타운 개발을 검토하려는 건 맞다”면서도 “세종시는 일단 많은 기관을 유치하고자 MOU를 체결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이전 계획도 안 나와 부지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바 없다”고 밝혔다.⁹⁰⁾ 결국 중앙·지방을 포함한 신문·통신·방송사의 유력 진출지는 ‘제2언론단지’로 맞춰질 전망이다. 시는 6-1생활권(누리리) 옛 월산산업단지 부근 입지 조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세종의사당 후보지와 거리가 가깝고 언론 기능의 집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입지 확정 후 후속조치 성격으로 ‘제2언론단지’ 입지 조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⁹¹⁾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이전 계획과 함께 내년까지 진행될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정’ 작업 과정에서 제2의 언론단지 계획을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⁹²⁾

4) 조성 방안별 종합평가

정부는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2021년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것을 국정과제로 천명하였다. 이 회의 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지칭한 점, 그리고 지원기능 확충을 위하여 언론기관을 포함한 연관기능의 이전 수요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힌 점이다. 이에 화답하듯이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주변의 인프라로 국회타운은 물론이고 미디어단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세종시가 행정·정책·문화·미디어도시의 정체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타운 조성은 언론기관 등의 동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미정이지만 정부와 세종시 모두 세종의사당 인근에 언론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 추진의 의지만큼은 확인된 사실에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로서 세종시가 추진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언론단지 조성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언론단지 조성 방안별 종합평가

방안	성격	적용모델	실행가능성
프레스센터 건립	세종프레스센터 한국프레스센터 세종분원	한국프레스센터 국회 소통관	단기과제 (단독추진 가능)
미디어스트리트 조성	세종언론거리(SMS)	DMS(상암DMC)	중기과제 (공동추진 가능)
미디어단지/M&E클러스터 조성	국가사업 세종미디어시티(SMC)	상암DMC 고양영상밸리	장기과제 (단독추진 불가)

세종사옥 건립' MOU 박차. http://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9149

90) PD저널 2021.05.07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에 방송사들 세종센터 추진 러시: MBC·EBS·MBN 등 잇따라 세종시와 '세종사옥' 업무협약 체결 <https://www.pdjour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95>

91) 디트뉴스24 2021.10.21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부지' 매각 공전 거듭: 중앙·지방 언론사 입지, '제2언론단지' 유력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482>

92) 세종포스트 2021.03.06. 세종시로 '방송사 유치' 효과, 제2언론단지 적극 조성해야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05>